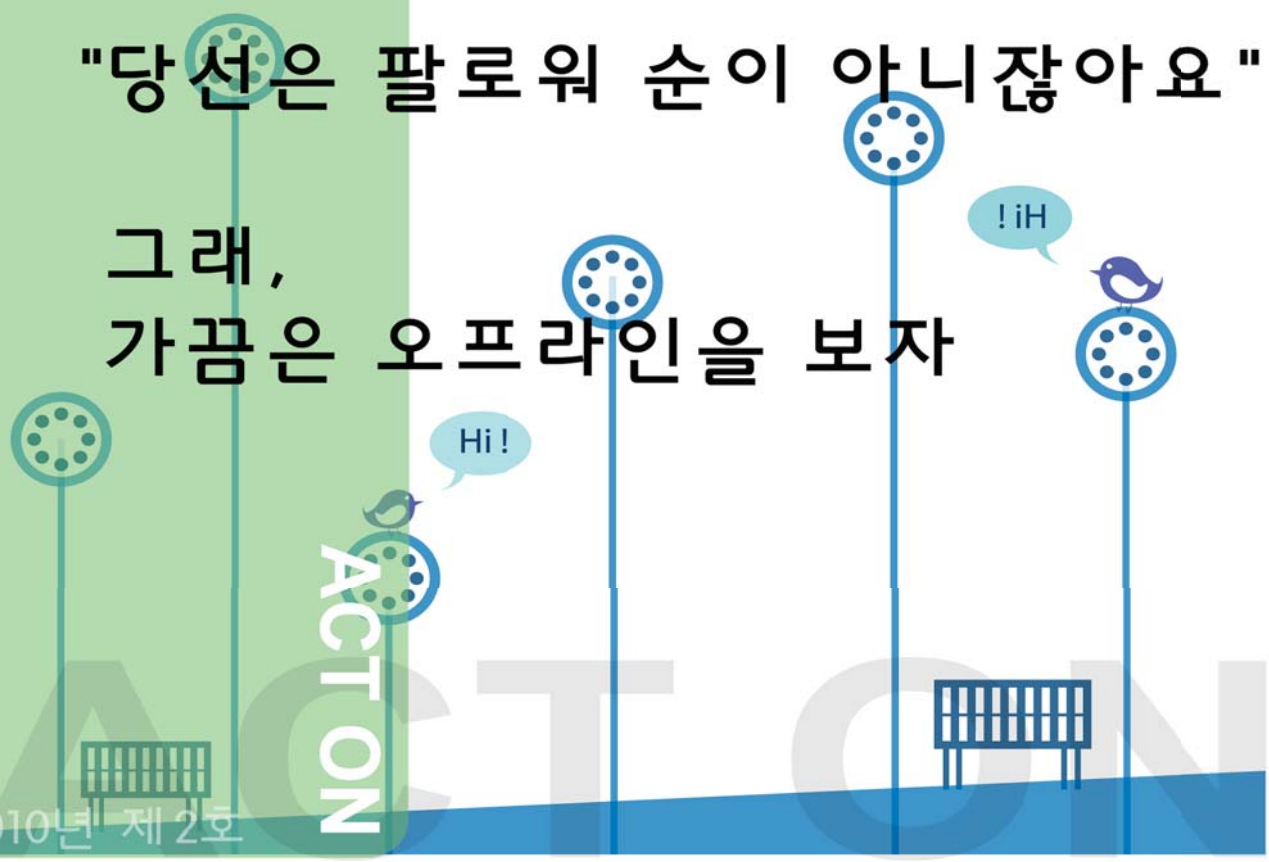
진보네트워크센터 계간지
정보운동 액트온 | ACT ON

정보운동 액트 ACT

HUMAN RIGHTS IN INFORMATION SOCIETY

"당신은 팔로워 순이 아니잖아요"

그래,
가끔은 오프라인을 보자



2010년 제 2호

정보운동 액트온 | ActOn

"당선은 팔로워 순이 아니잖아요"
그래, 가끔 오프라인을 보자.

통권 제9호 | 2010년 제2호

진보네트워크센터

ASKII Art : 2010 진보네트워크센터+참세상 MT 한라산 정상

우측 중단 이종회 대표 뒤편 백록담의 옥빛이 손에 잡힐 듯 선연하다.

촬영 : 빼트(참세상) / 이미지컨버팅 : http://www.glassgiant.com/ascii/

코드 : 역감시逆監視, inverse surveillance

이것은 작은 교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초등학생을 교사로 보이는 이가 몸과 마음을 다해 폭력을 정확하게 행사합니다. 일명 '오장풍' 사건. 사건은 폭행이 발생한 현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 동영상으로 촬영 한 후 인터넷에 올리면서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마구 폭행했던 오장풍 선생은 결국 초등학교 교사에서 직위해제 되었지만 민심은 아직 수그러들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이 크게 알려질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의 공분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동영상'이라는 생생한 매체를 통해 오장풍의 광기가 날것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동영상이 교실친구에 의해 촬영된 것이 아니라 교실CCTV 등 이미 통제권을 쥔 이들의 기기를 통해 촬영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파급력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사건이 알려지고 오장풍씨가 직위해제 된다 하더라도 동영상은 삭제와 편집을 거쳐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작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추측이야말로 가장 생생한 현실일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학교에서 천안함 부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고사리 손에 쥐어져 있던 핸드폰 속 동영상은 역감시의 표본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손에 쥐어진 감시수단이 부정의를 알리고 만인의 공분을 모아 사악한 자를 벌합니다. 자본과 권력의 감시수단은 우리의 생산을, 우리의 도덕을,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왜곡하는 체계적 수단이라면, 핸드폰 속 아이의 동영상, 당신의 역감시는 일상의 지층에서 생생함으로 저들의 폭력과 만행을 기록하는 무기입니다.

이렇게 역감시는 단순히 감시를 떠나 약자의 저항수단이 됩니다. 아이의 손을 떠나 인터넷으로 흘러간 동영상은 더 이상 화소와 둔탁한 소음의 조합이 아닌 고발이 됩니다. 저들은 지배하기 위해 감시하지만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기록합니다. 저들의 뻔뻔한 폭력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당당하고 은밀하게 버튼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강용석의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듣던 이들 중 누군가가 버튼을 눌렀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적 없다' 판에 박힌 저들의 낯짝은 얼마나 더 비틀려야 진실 토해낼까요.

늦었습니다. 약간은 미안합니다. 빈 시간을 벌충하려다 보니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9호' 입니다.

laron : @picotera

계간 정보운동 액트온 ActOn

통권 제9호 | 2010년 제2호

발행일 2010년 7월 23일

등록일 2003년 8월 1일

발행처	진보네트워크센터
발행인	이종회
편집인	라론
편집	라론
사진	빼트
인쇄	천광문화사

등록번호	서울 바03553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홈페이지	http://act.jinbo.net
이메일	picotera@jinbo.net
전화	02-774-4551
ISSN	1976-1953

정보 라이선스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본 정보운동 ActOn에 실리는 모든 내용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영리금지'를 따릅니다.
www.freeuse.or.kr/license/2.0/yg
표지의 벡터 이미지는 Dryicons(http://dryicons.com)의 이미지를 사용했음을 밝혀둡니다.

차례
통권 제9호 | 2010년 제2호

"당선은 팔로워 순이 아니잖아요"
그래, 가끔 오프라인을 보자.

코드 : 역감시 逆監視, inverse surveillance_ **laron** 003

section 001. 소통, 트위터에서 길을 잃다 007

A 선거, 소통 그리고 인터넷_ **laron** 008

B 트위터는 정치 소통의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는가_ **새벽길** 018

Γ 본격 아이폰과 트위터에 관한 안진보적인 글_ **김슷캇** 028

section 010. 기고 글 모음 035

Δ [특별기고] 인터넷 게임의 사회학_ **Empty Butterfly** 036

Ε 기술 발전과 통제능력의 강화_ **오병일** 042

Ζ 두리반, <방 있어요?> 집담회 속기록/후기_ **laron** 047

Η 천안함 괴담_ 장여경 058

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_ **정민경** 060

Ι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문 065

section 011. 진보네 워크센터 077

Κ '정보운동' http://act.jinbo.net/ 이 새로이 오픈합니다. 078

Λ 진보넷의 야심찬 기획. '30minutes' 085

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_ **정민경** 092

Ν 노동 감시/어린이 감시 반대하긔_ **명야핑** 101

Ξ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_ **정민경** 103

Ο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긴급 성명 106

section 001. 소통, 트위터에서 길을 잃다

A 선거, 소통 그리고 인터넷_ laron

B 트위터는 정치 소통의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는가_ 새벽길

C 본격 아이폰과 트위터에 관한 안진보적인 글_ 김슷캇

선거, 소통 그리고 인터넷

laron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picotera

소통

소통이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정보를 주고받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앎이 옳은가 그른가를 비교, 판단 한다. 그렇다면 소통을 한다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 정보를 주고받는 다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간에 정보내용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가령 누군가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굳이 다른 이의 앎을 알거나 자신의 지식이 옳은가를 확인하기 위해 타인과 소통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 개인이 가진 정보력과 판단력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개인의 한계를 넘기 위해 그리고 또 그 한계까지 자신의 정보를 판단을 확장하기 위해 타인과 소통을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의 말을 왜 듣는가? 왜 말하는가?

소통주체의 변화가능성을 생각 해 보자. 이것은 “달리기를 해라” 라거나 “적게 먹어라” 등의 명령조로 이루어지는 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언어를 심사숙고함으로서 그것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옳다고 판단 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 또는 그 반대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의 주의주장을 효과적으로 타자에게 전달해 타자와 나의 최소공약수를 찾는 과정, 타자의 언어를 내 삶에 비추어 비판하고 수용하고 거부하는 과정. 내가 변화하고 타인이 변화할 수 있기 위한 수단으로의 소통. “모든 사람이 같다면 소통에서의 문제는 왜 발생하겠는가? 또한 모든 사람이 다르다면 소통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라는 아렌트의 지적처럼 소통은 차이와 동일성의 겹침을 발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소통 수단인가? 호의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인터넷에는 소통이 가득하다. 당신의 모니터에서 쏟아지는 포탈의 플래쉬 광고조차 당신이 클릭을 할 때에 존재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당신의 선택 속에 읽혀야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어떤 것도 인터넷에서 일방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의 인터넷 생활이 포탈, 뉴스 등 정형화된 틀에 길들여져 있는 것뿐이다. 악의적으로 생각한다 해도 인터넷은 훌륭한 소통수단이다. 적어도 인터넷에서는 오직 하나의의견이 대통령 담화문처럼 우악스레 흐르지 않는다. 건전하고 정당하며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꿀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주장에도 그것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 당신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다. 당신 역시 그 규모가 어떠하건 당신과의 차이에 대해 반격할 기회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그것의 형식이 어떠한지, 그것의 강도가 어떠하건) 소통은 인터넷 어디에나 흐르고 그것에 접한 당신에게 인상을 남긴다. 그러한 인상들의 총체가 내가 특정 커뮤니티, 포탈, 게시판에 가지는 인상이 된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인터넷의 나는 내가 속할 곳, 주시할 곳, 배제할 곳을 정한다.

인터넷은 소통에 기반 해 있다. 덧글, 커뮤니티, 당신이 선택한 뉴스, 여가를 위한 정보 등 인터넷은 소통의 거대한 집적 위에서 존재한다. 다시, 소통은 소통주체간의 변화의 가능성이다. 서로 간에 동일성과 차이들을 확인해가며 겹침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자 결과들이 인터넷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 글의 과녁은 다음으로 좁혀진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인터넷, 그 중에서도 선거 시기 인터넷은 소통하고 있는가?

기존 언론매체 그리고 인터넷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은 중요한 소통수단이지만, 인터넷이 다른 매체들에 비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 2009년 9월 기준 3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77.2%, 3,658만 명[1]이 인터넷을 사용하며, 2009년 5월 기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1,593만 명[2] 등의 통계를 보면 인터넷이 가장 주요한 매체인 듯 보인다. 통계는 인터넷이 TV, 라디오처럼 각 가정과 사업장에 널리 퍼져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망은 넓게 퍼져 있고 그 사용자 또한 국민 대다수라 할 수 있지만 라디오, TV, 신문 등 전통적인 그리고 (거의) 일방향적인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이들은 인터넷 여론을 그리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인터넷에서는 끊임없이 정보의 교환이 발생한다. 그러한 정보 교환을 기반으로 하여 물리적인 교환/거래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 언론매체가 요구하는 '액션'이라는 것이 인터넷에서 나올 수 없다. 오히려 인터넷은 오프라인의 '액션'에 대해 평하고 예측하고 논의하는 공간이지 직접적 '액션'이 창출되는 공간은 아니다. 당연히 기존 매체가 인터넷에서 펜을 잡거나 카메라를 들이댈 필요는 없다.

기존 언론매체가 인터넷에 태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하루 종일 반복되는 메세지, 근엄한 활자로 굳건히 찍혀있는 어조를 매일 접하는 큰 규모의 대중이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건으로 인해 인터넷을 가까이 대하기 어려운 이들, 인터넷이라는 새 시대의 매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이들은 매우 많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일일이 링크를 찍고 로그인을 해야 하는 인터넷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기존 언론매체의 주요 소비자층을 이룬다. 반면 인터넷만이 접하는 매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도 있다. 인터넷이 노동환경이자 유희환경인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노동자, 학생, 자영업자 등이 그러하다.

세부 통계를 보면 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인터넷에 적응하기 힘든 5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52.3%, 60세 이상 20.1%로 거의 100%에 달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터넷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거의 100%에 달하지만, 서비스 판매직의 경우 80.4%, 생산직의 경우 53.9%, 주부의 경우 65.8%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학력에 따른 편차도 크다.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이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 요약보고서

2 인터넷통계정보시스템 ISIS 2009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이하 모든 인터넷 통계는 최종보고서 인용

용하지만, 일반인 가운데 초졸 이하는 24.1%, 중졸은 34.3%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통계자료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학력자가 생산직에 많이 종사하게 되는 상황의 반증이라 생각할 수 있다. 통계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청 · 장년층, 사무/관리직, 고학력층이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고령자, 생산직, 저학력층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적게 사용하는 이들의 주요 매체는 상술한 바와 같이 TV, 라디오, 신문 등 기존 매체이다. 그들은 중립 내지는 보수를 표방하는 정형화되고, 상호소통이 제한적인 매체들로부터 메세지를 받는다. 그들에게 인터넷은 모두들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복잡해서 꺼려지는 매체로, 트위터는 시끌한 유행 같은 것일 뿐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존 매체의 영향력은 인터넷의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그들이 기존 매체의 모든 내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지만, 다양성의 폭에서 기존 매체는 인터넷에 비해 빈약하며 따라서 기존 매체의 수용자들이 넓은 스펙트럼을 안에서 의견을 선택할 기회가 적을 것이라는 것은 쉬이 예상할 수 있다.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이들을 생각 해 보자. 인터넷은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컨텐츠가 소비된다. 더욱이 단순히 소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변에 확산하고 변용하는 것 까지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고 소통하고자 한다면 매일 보는 가족, 속사정 다 아는 친구가 아닌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이들의 무수한 의견을 얻고 또 내 의견을 전할 수 있다.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이들은 의견을 접하고 판단하는데 머물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 표현의 구름들, 다발들이 인터넷 여론이—또 하나의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의 최신 유형이 바로 Social Network Service(이하 SNS)이다.

SNS – 특히, 트위터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 3,658만 명 중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서비스 이용자는 상승추세에 있지만 현재 대략 250만 정도로 집계된다. 크게 잡아도 전체 인터넷 이용 인구의 7%만이 SNS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Daum과 Naver등 국내 주요 포탈의 내국인 회원수가 3천만 명을 훌쩍 넘어 선 것을 감안한다면 SNS의 위력은 언론노출에 의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처럼 적은 이용자수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도 불구하고 트위터가 이

번 6.2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은 다양한 의견과 정치적 참여 독려를 개인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표면화 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 기존에는 언론과 국가기관 주도의 선거독려, 정책토론, 후보지지가 이루어졌다면 인터넷-트위터 공간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동의하는 이야기들을 전파한다는 새로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트위터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과 정치적 참여 독려를 개인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표면화 된 것 이 주된 요인이다. 기존에는 언론과 국가기관 주도의 선거독려가 이루어졌다면, 트위터 공간에서 각 개인 자신이 동의하는, 자신의 이야기들을 직접 퍼뜨리는 과정 그 자체가 이슈가 되었다. SNS의 특성 상 이슈가 되는 주요 인물들의 의견을 언론의 매가 없이 들을 수 있고, '나'의 의견을 그들에게 바로 전할 수 있다는 직접성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이다.

트위터는 140자의 한계 내에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다. 전화처럼 서로가 연결되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알아서 걸러 듣고 말하는 방식인 것이다. 트위터 시작 초기의 수많은 팔로follow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내가 듣고 싶은 이들,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이들만을 걸러 듣게 되는 필터링이 이루어진다. 필터링은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특정 정치지형 범위 내에서 나누고 소통하는 기능을 한다. 곧 트위터 안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걸러진 메세지들의 다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대세인가' 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이는 다양한 의견들이 보이는 게시판과 달리 '사람-계정' 자체가 컨텐츠인 트위터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사람들은 공공연히 자신의 정치지향을 표시했고, 자신의 정치지형과 양립불가능하거나 극단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의 메세지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언팔unfollow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했다. 개인들의 트위터 운용 정책은 '적'들의 주요 메세지 창구 몇 개를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면 자신과 비슷한 이들을 중심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끼리끼리 뭉친다는 이야기인데, 그 '끼리끼리'를 넘어 폭넓고 다양한 교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의 여러 시도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트위터에서 수많은 이들이 다양한 정보 속에 자신만의 비판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슷한, 서로 장사가 될 만한 정치지형 내부의 싸움이지 서로의 차이와 동일성의 겹침을 소통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착시현상 속에서 트위터 이용자들은 연일 ‘MB심판’을 외치고 ‘No Vote, No Kiss’라고 투표를 독려했지만, 분명 한국 트위터 이용자들의 대세는 한국 인터넷의 대세가 아니다. 설령 트위터의 대세가 인터넷의 대세라 할 지라도 그것은 아직 찻잔 속의 태풍이다. 선거로 국한해 보자면, 인터넷 상에서 수많은 이들이 다양한 정보 속에 자신만의 비판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슷한, 서로 장사가 될만한 정치지형 내부의 싸움이지서로의 차이와 동일성의 겹침을 소통은 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오세훈을 비판하는 수많은 트윗 속에서 민주당-한명숙, 유시민 지지자들과 진보신당 지지자들은, 딱 그들만 다투었다. 이것은 그들의 논쟁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 이용자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트위터 이용이 가능한 이들만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트위터는 아침출근시간부터 점심시간 전, 점심시간 이후부터 오후6시 퇴근 전에 가장 활발하다. 트위터를 노동시간에도 할 수 있는 이들이 트위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무직이, 관리직이, 전문직이, 학생이 이용하는 것이다. 노동환경으로 인해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다. 택시 노동자가 손님을 태우면서 트윗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 가판대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트윗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들은 트윗에서 오가는 수많은 이야기와 별개로 TV(DMB),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사회를 접한다. 이처럼 이용자 적은 이용자 규모와 트위터 내의 협소한 정치적 지형 등을 생각 해 보았을 때 한국 트위터 이용자들의 대세가 곧 한국 인터넷의 대세가 아니다. 설령 트위터의 대세가 인터넷의 대세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6.2지방선거, 트위터 돌풍?

인터넷을 한국사회의 중요한 소통수단임을 인정 할 수는 있어도 보편적 소통수단으로 기능한다 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터넷 상의 여러 논의는 결국 특정 계층, 집단 간의 논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논의되고 소통되어 어떠한 합의점들이 도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 속에 퍼져나가는 것에 많은 저항이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중지가 모아져서 흐름을 이룬다 해도 그것이 한국사회에 질문을 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는 장벽이 있다. 인터넷의 이야기가 사회의 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주체와 제도,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토론하고 설득할 매체 등 인터넷의 요구를 떠안을 실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의 소통은 그것만으로도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의미를 제공하며, 굳이 물리적 행위체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물리적 실체의 부재라는 장벽과 함께 위에서 인터넷 사용자층의 통계를 제시했을 때 이야기 했듯이, 세대별/학력별/직업별 인터넷 이용 편차 역시도 인터넷의 담론이 사회전반으로 확산/실현되는 것의 장벽이다. 이런 점에서 '선거'라는 공간, 여론을 받아 안을 제도와 주체가 실재하고, 보편적이며, 누구나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인터넷의 여러 이야기가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실현 될 수 있는 공간이며 그래서 선거가 인터넷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수많은 이야기의 용광로가 되는 것이다.

선거공간에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쏟아내고 각종 논리와 정치적 다툼이 횡횡하지만, 현재로서는 인터넷에서의 유력 정당 또는 후보가 오프라인의 결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6.2 지방선거 당시 한국에서 트위터를 이용하는 정치인 중 가장 많은 followers를 거느렸던 노회찬(@hcroh, 2010년 6월 24일 현재 followers 58,597명) 진보신당 대표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 득표율은 3.26%에 머물렀다. 유력 후보였던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각종 TV토론회를 보이콧하며 자신의 약점을 감추었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등의 기존 유력자들은 전통적 매체가 가지는 힘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으며 그 힘을 유지하는데 집중했다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떠오르려는 이들은 새로운 매체(twitter)를 적극 활용했다. 6.2 지방 선거에서 소수 정치세력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기반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언론의 문을 열려 했다면, 수권세력은 기존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새로운 매체에 대해 지지세가 확인되지 않은 한 전혀 개입하지 않는 방식을 취했다.

아직 트위터는 한국 사회에서 그저 지저귐(twit)에 불과하다. 2010년 민주당 신년 기자간담회 당시 정세균 대표가 민주당을 '트위터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었고,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SNS에 의무 가입시키겠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이 SNS에 대한 정당을 비롯한 여타 사회적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통과 대안과 다양한 이야기들의 섞임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정당은 SNS를 활용할 생각이 있었지, 소통-변화 할 생각은 없어 보였고 그저 몇몇 정치인들의 각개약진만이 돋보였을 뿐이다.

독설닷컴[3]을 운영하는 시사in의 고재열(@dogsul)기자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박사모'가 트위터스피어에 들어온다면 트위터의 정치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솔직히 달갑지 않은 일이다. 트위터러들의 갈등 양상이 본격화 될 것이

3 http://poisontongue.sisain.co.kr

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보수 세력의 트위터 입성은 오히려 반길 일이다. 정치적 유사성을 지닌 이들이 끼리끼리 뭉쳐 자신들의 이야기만이 옳다는 착시효과 속에서 찻잔 속의 태풍을 여유로이 즐기는 것 보다는 다양한 의견과 대립, 갈등, 섞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치지형과 담론을 올바르게 반영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변화의 중심

선거시기 인터넷의 이야기가 그저 지저귐이 아닌 변화의 중심으로 평가되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한국에서 선거와 인터넷의 열풍이 불던 것은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당 내부 경선의 극적인 승리, 개혁적 국민정당의 해체한 유시민의 노무현 캠프 입성,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와 선거 하루 전 단일화 결렬 등이 주요 오프라인 이슈였다면, 서프라이즈로 대표되는 친노진영의, 본격 정치사이트의 등장과 지지자들의 이야기 퍼뜨리기가 온라인 이슈였다. 2004년 제17대 총선 역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초유의 탄핵사태를 끼고 진행되었다. 거기에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 민주노동당의 원내 입성, 탄핵반대 촛불집회 등의 수많은 오프라인 이슈가 있었다. 오프라인의 반향으로서 온라인이 들끓고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지 그 역은 아니었다.

2004년 이후 2007년 17대 대선에서 인터넷의 여론은 좌우지간 이명박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과 관련된 수많은 비판 자료들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사람들은 이명박을 비판함에도 대안으로 지지할만한 이가 없음에, 야당의 무능을 탄식하며 대선은 조용히 끝났다. 이런 분위기는 2008년 4월 총선에까지 이어져 여대야소의 형국에 이르게 된다. 인터넷은 이명박을 비판했지만 그것보다는 야당의 무능과 우리 사회의 양분된, 협소한 정치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던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인터넷의 여론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오프라인의 실체를 요구한다. 그러한 연결이 불가능하면 인터넷의 여론들, 이슈들은 한 시기의 실현되지 않은 유의미한 주장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다.

위의 예들과 달리 인터넷의 웅성거림이 직접적인 움직임을 형성한 사례라면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촛불집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졸렬한 한미FTA협상,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소규모 학생들의 집회에서 연인원 100만이 넘는 대중 집회, 대통령의 사과, 7월의 강경 진압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소통하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다. 온라인 여론 형성 → 오프라인 직접 행동 → 온라인 토론/전략수정 → 오프라인 직접

행동의 선순환 고리는 점점 커져 우리 사회를 흔들었다. 다만, 촛불 이후 정치일정이 없었으며 대의제 의회민주주의 아래에서 대중의 주장은 마땅한 분화구를 찾을 수 없었다.

선거 국면에서의 인터넷 소통은 주요 전략지점으로의 집중, 정치적 피아구분 등의 역할을 하며 가장 주요하게는 기존 매체에서 다루지 않는 정책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사람들이 이전의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고 변경하는 과정이 인터넷 정치를 이룬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노력은 합리적 판단, ~빠(눈감고 찬양) 혹은 ~까(덮어놓고 비난), 그리고 분열증적 태도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이루게 된다. 1992년 14대 대선까지 한국의 선거가 거대 군중유세의 세 싸움이 가시적인 힘겨루기의 주요 양상이었다면, 이제 예전의 세 싸움 양상은 TV와 신문 그리고 인터넷으로 전이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물리적 기반은 한국사회에서 보편화 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지만 사용에 있어서 계층별, 직업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차이가 뚜렷한 매체이다. 사회변화의 흐름에 따라 인터넷의 흐름이 변화하는 것이지 그 반대의 경우를, 특히 한국사회의 선거에서 긍정하기는 어렵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직 한국사회에서 승인된 변혁의 방식이 아니다. 인터넷이 이례적으로 선거 이슈로 들썩인다면, 그것은 오프라인에서 그만한 정도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좁게 이야기 하자면 아직 인터넷의 담론은 고급정보에 수월하게 접근 가능한 기존 언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트위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트위터의 수많은 트윗들은 갓 올라오거나 눈여겨보지 못한 기사, 블로그 포스트의 링크와 그에 대한 짧막한 평들이다. 유의미한, 이야기 될 만한 것들은 아직 주류 언론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일본 정치를 관료가 움직인다고 말한다. 누군가 나에게 한국 정치는 누가 움직이느냐고 질문한다면, 한국정치는 언론이 움직인다고 말할 것이다” 후마니타스 대표 박상훈의 말은 현재까지는 유의미한 해석이다.

다시, 소통

우리는 인터넷-소통을 통해 변화되었는가? 선거시기 사람들은 인터넷을 참조하고 스스로의 정치적 판단들을 변화시켜 왔는가? 적어도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의견을 접하는 이들은 변화되었을 것이다. 변화라는 형태가 굳이 투표소의 기표행위까지 도달하지 않았

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구석에 몰리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열광과 탄식을 반복 속에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찾아간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들이 오프라인으로 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응집되어 사회변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요한 가능성임을, 그리고 아직 가능성뿐임을 알고 있다.

한편으로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이들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것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노동조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들은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interaction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기존 매체 안에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다. 이야기 참여자로서, 창조자로서의 경험이 없다는 것은 그들을 메세지의 수용자로 남게 하고 이는 기존 매체의 공고화와 정치적 괴리를 낳는다. 한나라당의 이해와 전혀 다른 삶을 가진 이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작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을 어떻게 인터넷 속의 다양한 이야기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들이 다가갈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다시 한 번. 소통은 괴로운 과정이며, 일정부분 자기파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세계관, 인식과 다른 정보들이 쏟아질 때 대부분의 인간은 인지부조화 상태를 평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극단적인 거부, 폐쇄의 형태만 아니라면 이러한 평형의 노력 속에 인식은 확장되고 이해의 폭은 넓어지기 마련이다. 자신과 수많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간 안에서도 차이와 동일성은 계속 갈라지고 얼개가 되어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끌어당긴다. 이 얼개 속에 누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두에게 모든 것을”이라는 식의 건전한 선언으로 덮어 둘 수 없다. 우리는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며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저 오늘의 결론일 뿐이다.

트위터는 정치 소통의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는가

새벽길 진보블로거[4]
@gimcheol

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한달이 넘었지만,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트위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심지어 스마트폰의 확산과 결부되어 '검지세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연합뉴스가 만들어낸 신조어인 '검지세대'란 '검지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20대 초반의 신세대'를 말한다. 가부장적인 리더십과 냉전 구도 강요에 불만을 가진 이들 검지세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들과 소통하지 않는 집권 여당에 패배를 안겼다는 것이다.

트위터의 위력은 지방선거에 그치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조차 광고를 거부한 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도 트위터에서의 입소문에 힘입은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가 하면, 훼미리마트의 최저임금 위반건수가 66건(위

4 http://blog.jinbo.net/gimche/

반율 73.3%)으로 가장 많았다는, 청년유니온의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427개)' 결과가 알려지자, 트위터를 통해 '훼미리마트 불매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어 최저임금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처럼 스마트폰과 트위터의 확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존의 소통기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들이 제법 있는 듯하다. 트위터는 과연 새로운 정치 소통의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트위터 열풍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수혈은 대부분 정치인들에게서 온다. 최근 박근혜의 트위터 계정 개설과 노회찬의 트위터 개통 1주년 소감 글은 트위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물론 내가 보는 시사점은 언뜻 떠오르는 트위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는 조금 다르다.

노회찬, 7월 6일은 또 하나의 생일?

"7월 6일 이후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관계 속에서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느낀 것은 트위터생활 6개월도 더 지나서였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자신이 트위터를 시작한 7월 6일을 또 하나의 생일이라고 인식한다. 트위터에 그렇게 의미부여할 수 있을까. 트위터 또한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에도, 온라인 의사소통기제로서 이메일, 메신저, 블로그 등이 출현하고 영향력을 확장했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활용되던 핸드폰에서부터 이메일, 메신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이제는 스마트폰과 트위터 또한 인터넷을 통한 소통 수단으로 하나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변화가 과거 산업혁명기에 등장했던 통신수단들이나, 과거 신문을 뛰어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충격만큼 우리 생활을 급격하게 바꾼 것은 아닐 것이다. 트위터 등장을 경계로 현재와 포스트(Post) 트위터 시대가 구분되지도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단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까닭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선거와 관련해서도 문자서비스, 블로그, 유튜브 등 동영상 등이 새롭게 선을 보이고 활용되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 물론 한국에서는 참여억제적인 선거법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노회찬은 이렇게 얘기한다. “분명한 사실은 트위터는 이제까지의 사회적 소통방식 중에서 가장 진화한 것이며, 따라서 더 진화한 다른 방식으로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가장 진화한 형태라 해서 트위터가 사회적 소통의 모든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트위터는 가장 진화한 사회적 소통방식이라기보다는 가장 최근에 나온 소통방식이라고 해야 타당하다고 본다. 트위터를 사용하는 게 아무리 쉽다고 해도 트위터 자체를 진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접근 가능성마저 차단당한 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진화된 방식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트위터라는 공간이 개인 사이 소통을 넘어서 집단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부각되면 될수록 거기에서 소외된 이들은 더욱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트위터상의 소통은 적정한 수준에서 적정한 이들과 이루어지는 것일까. 노회찬 대표는 7월 13일 현재 63,078명의 팔로워를 보유하여 정치인 가운데 유시민 국민참여당 주권당원(72,80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다. 물론 팔로잉 수를 보면 유시민 씨의 12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65,545명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팔로워보다 팔로잉 수가 더 많은 노 대표는 둘다 소중한 친구들이지만, 자신의 말을 듣고자 자신을 따르는 분들보다 그분들 말을 듣고자 자신이 따르는 분들이 더 소중하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자신이 팔로잉한 이들과의 소통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일 게다.

하지만 6만명이 넘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설마 그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다 읽고, 그 중에 일부를 선별하여 리플도 하고, 재전송(RT)도 하는 것일까. 자신의 팔로잉 수가 300명을 넘어가면 타임라인으로 올라오는 글들을 읽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6만명이 넘는 이들이 글을 쓴다면 하루내내 스마트폰을 켜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타임라인을 확인한다고 해도 절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트위터에서는 리스트(Lists)를 제공한다. 자신이 읽고 싶은 이들의 글만 선별(filtering)해서 읽을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글들을 용이하게 분류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리스트에서 제외된 이들과는 팔로잉을 하고 있을지언정 원천적으로 소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트위터는 소통의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소통이 많이 일어나게 하지도 않고,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도 없다.

트위터와 언론

물론 트위터로 상징되는 사회적 소통의 활성화는 언론을 대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트위터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수단의 발달은 지배권력 및 자본과의 유착을 무기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소수 거대언론사들의 독점적 지위에 균열을 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타워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연합뉴스보다 1시간 이상 빨리 트위터에서 이 소식이 알려졌던 것처럼, 트위터는 주류 언론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생생한 분위기를 신속하게 전달하는가 하면, 언론이 미처 취재하지 못한 것까지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 부처에 보도 유예 요청이 걸려 있는 사안이 트위터에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류 언론의 기사에 인용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트위터가 제기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들이 쏟아져나온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체 자정작용을 통해 해결이 되고 있으며, 해외 언론에서도 트위터가 주류 언론의 한계를 보완해줄 것으로 보고 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애쓰는 것도 트위터의 소셜뉴스로서의 역할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우선 신속성, 속보기능이 언론의 전부는 아니며, 가끔씩 트위터가 기성 언론보다 더 신속하게 사건사고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화제가 되긴 하지만, 140자 이내의 단편적인 소식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독자들이 훨씬 많다. 몇 차례에 걸친 글을 통해 또는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매체의 기사나 관련 글들을 링크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확인되는 트위터의 힘은 정보의 원천이라기보다는 연결통로로서의 역할에서 나오는, 간접적인 것이다.

트위터에서는 속보성 경쟁이 이루어진다. 관련기사 링크를 통해 행해지는 속보성 경쟁에서는 얼마나 풍부한 분석내용을 담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단편적인 것이라도, 설사 조중동에서 내놓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자체를 신속하게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링크된 글들이 숙독될 것인지도 의문스럽지만, 이러한 속보성 경쟁 속에서 다른 관련기사들에 비해 조금 늦게 인터넷 상에 올라오긴 했지만, 훨씬 풍부하고 분석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기사들은 주목되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트위터를 통해 사회적 소통이 활성화된 것에는 기존 인터넷매체와 오프라인 언론사들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트위터 개통 소식이 알려진 것, 그가 며칠 만에 2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확보했다는 것은 언론에서 이를 기사

화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정보이다. 마찬가지로 노회찬 대표가 7월 6일을 또 하나의 생일이라고 말한 것도 나는 인터넷매체인 레디앙에 보도되었기에 알게 되었다. 물론 노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트위터 시작일] 트위터 시작일(2009년 07월 06일)로부터 364일 지났습니다[5]" 라는 글을 통해 알게 된 이들도 꽤 있을 테지만 레디앙보다는 적을 것이며, 노 대표가 이를 계기로 말하고자 했던 것까지 파악하는 사람을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최근에는 트위터를 통해 속보를 접하고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자주 접하는 기사제목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거의 보지 않게 되었다는 누리꾼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하지만 단지 언론에서 제공하는 뉴스만이 트위터를 통해 유통되는 것은 아닐 터, 기사가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하는 데에도 상당한 수고가 필요하다. 언론이 보여주는 대로 보지 않고 비슷비슷한 뉴스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요한 기사만을 직접 골라서 보는 데에도 누군가의 노력이 요구된다. 게다가 트위터를 통해 퍼져나가는 기사들은 자신의 팔로워들의 관심을 끌고 자극성이 짙은 것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제목으로 승부를 걸고, 제목이 기사의 전부인 오프라인 주간신문들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을까.

트위터의 영향력

정보화의 영향력을 다룬 가설 중에 강화정치 모형이라는 게 있다. 정보화가 조직 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관련하여 기존의 권력자, 상층부의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가설이다.

트위터 또한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순수하게 트위터를 통해 스타로 거듭난, 이를테면 엄청난 수의 팔로워나 영향력 있는 재전송(retweet), 인용(mention), 글쓰기—블로그 글쓰기를 포스팅이라고 한다면, 트위터에 글을 남기는 것을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명해진 이는 그리 많지 않다. 드물게 존재하는 이들이 과잉 부각되었을 뿐이다.

---

5 http://twtbiz.net/user/hcroh

트위터를 잘 활용한다고 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트위터 외의 공간에서 이미 일정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또다른 부가적인 수단으로 트위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당연히 트위터에 똑같은 글을 쓰고 똑같은 글을 재전송, 인용, 링크하는 경우에도 사람마다 행사하는 영향력은 동일하지 않다. 시민들이 노동자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알려나가기 위한 '노동자를 생각하는 캠페인' 이라는 트위터모임[6](개설자 슈퐁크 @poonk77)이 있다. 여기에서 펼친 여섯 번째 캠페인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관심을 갖고 이 캠페인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라면 누구나 이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공감대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음에 틀림없다. 특히 이 최저임금 캠페인에 참여한 트위터는 다른 캠페인들보다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이유는 노회찬 대표가 해당 글을 재전송(RT; Retweet)한 것에 다시 RT를 하여 참여했던 이들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는 트위터모임에서 관련 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회찬 대표와 개설자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RT @hcroh: 응원합니다 RT @poonk77: (노동자를 생각하는 캠페인) 내년엔 최저임금이 시급 5,180원으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되는 6월 29일까지 힘을 모아주세요. http://durl.kr/n847 #노생캠_"

이런 예들을 통해 트위터에서 행사되는 영향력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트위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정치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트위터는 의제 설정(agenda setting) 수단으로는 유의미하다. 주류 언론이 트위터상의 움직임에 주목하기 쉽고, 이를 다루기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기사화、의제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갈수록 다음 아고라나 각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딸린 댓글과 함께 트위터상에 올려진 글들이 심심치 않게 인용되어 기사화되는 현상(인터넷 매체에서는 훨씬 빈번하게 일어난다)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면에 주목하여 대중이 직접 의제 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도 나온다. 그래서인지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시사IN 등의 인터넷매체들이 트위터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

6 http://bit.ly/bDGtOX

다. 인터넷매체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다.

그러나 트위터를 통한 의제 설정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의제설정을 위해 들이는 노력과 비용에 대비하여 트위터와 다른 수단을 비교할 경우 어느 쪽이 효과가 더 있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트위터, 선거문화를 바꿨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상대적으로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매체를 잘 활용했다고 자임하는 친노세력들은 트위터 덕분에 투표율도 오르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 일반인뿐만 아니라 소설가 이외수를 비롯한 유명인과 연예인들도 투표 '인증샷(증거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투표를 독려했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젊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시각각으로 투표캠페인을 벌인 대다가, 출구조사 결과가 트위터를 통해 먼저 흘러나오고 유통이 되면서 오후 들어 투표율의 급상승에도 기여하였다는 주장은 대중매체에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트위터를 비롯한 SNS의 위력은 앞으로의 선거에서 더욱 커질 것이며,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트위터 이용자도 늘어날 것이기에 그 만큼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위터를 접하지 못했거나 활용하지 않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분석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철균 청와대 뉴미디어 홍보비서관의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위력 발휘는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트위터의 가입자 수가 제대로 파악도 안되지만 업계에서는 많아 봐야 40~50만명으로 보며 그것도 수도권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강원도나 제주도와 같이 투표율이 높았던 곳과 트위터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트위터 이용자들끼리 투표에 많이 참여하자는 얘기는 했겠지만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다.

이러한 견해는 6.3 지방선거에서 2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이 27%로, 과거 선거에서의 20대 투표율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통계에 부합한다. 많이 잡아야 70만 명 정도에 불과한

트위터 이용자들이 아무리 재전송과 인용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트위터에 대해 소극적인 의견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그리 표출되지 않으며, 결국 적극적인 트위터 활용론자들의 주장이 대세를 점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 정치와 엇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 전 대표가 트위터에 뛰어든 것을 보고 보수세력들도 트위터를 비롯한 SNS의 유용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보수세력들은 트위터에서 뿐만 아니라, 아니 트위터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서 훨씬 다양한 대중들을 만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한다.

지배계급이 어떤 참신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정책수단이나 홍보수단을 채택하지 않거나 그에 소극적이라면 그것은 그보다 더 훌륭하고 효과적인 기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그 유용성이 입증된다면 압도적인 행ㆍ재정력을 이용하여 다른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던가 아니면 아예 어느 누구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봉쇄할 것이다. 리처드 엘리스는 『직접참정제도, 민주주의의 허상인가? —미국의 주민발안제도 현장』(2007, 아르케)에서 직접민주주의 기제들이 시민을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좀 더 민주적인 정치과정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직과 자금력을 지닌 특수이익집단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활용하는 데 중심에 서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터넷 공간, 특히 트위터 또한 이런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트위터 자체는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진보적인 성격을 속성으로 하지도 않는다. '반MB'가 트위터의 지배적인 정치적 코드임을 들어 트위터 공간에서는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진 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면서, '트위터만은 다르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트위터 이용자들의 자기기만이다. 특히 유시민 씨와 같은 친노세력 또한 보수정치인이라고 보는 내 입장에서는, 트위터 또한 그런 보수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은 공간이며, 이들을 진보적 이미지로 상징조작하는 진보분칠(Redwash - Greenwash에서 착안한 조어이다)일 뿐이다.

트위터에서 정치 소통은 가능한가?

트위터는 단문만 달 수 있는 댓글 기능에다가 이전의 메신저 기능을 결합시켜 실시간으로 전송까지 가능하게 만든 도구라고 할 수 있다. 140자의 한정된 짧은 메시지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깊은 논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트위터에서 논쟁이 붙는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근거를 밝히고 논리를 펴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뭉뚱그려 단순명쾌하게 설명하는 '주장과 선언, 결론' 만이 오고갈 뿐이다. 이성적인 사고를 공유하기에는 부족한 매체이기 때문에 피상적인 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특히 정치적 현상에 대한 인상이나 소감을 털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밖의 것들, 예를 들면 어떤 이가 가진 경제학적 지식이나 인식을 공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트위터는 다른 지면이나 인터넷매체를 통해 논의를 하고 이에 추가되는 것들을 간략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보조적인 기제에 불과하다.

140자 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요약하고 핵심만을 표현하도록 만드는 트위터는, 스스로의 생각을 간결하게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이다. 그 이상의 심도 있는 논의 전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얼마 전에는 트윗토론회도 개최된 바 있다. 하지만 장문의 글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개의 글로 나누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데도 글을 주고 받으면서 차분한 토론이 가능할까. 트위터 상에서도 토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 만큼의 인내심과 여유를 발휘해야 한다는 비용이 든다. 이를 감안하면 차라리 블로그나 카페 등의 매체에 글을 쓰거나 별도의 토론공간을 인터넷 상에 만드는 편이 낫다.

단문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로그보다 나을 것이 없고 상호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 중얼거림에 더 가깝기 때문에 메신저 대화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트위터가 확산되는 걸 보면 그 매력이 있는 건 한 듯하다. 갈수록 거리낌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세태와도 맞아떨어지는 측면도 이에 한 몫 했을 것이다. 물론 트위터는 물론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이나 지금 이 글과 같이 기고하는 행위도 같은 맥락에 있기는 하다.

트위터 상의 정치 소통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트위터가 과연 이용자들의 지적 능력을 고양하고 정치적 역량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부이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이들이 트위터 상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거침없이 표명할 수 있는 만큼 참여민주주의 제고에는 일정하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것처럼 트위터는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층들에게 선거를 하나의 놀이의 장으로 보도록 만들었고, 자신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로 인해 앞으로의 선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트위터를 개설한 것도 이런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장시간 동안 뛰어난 언변으로 토론에 임하거나 설득력 있는 문장력를 발휘하기보다는 툭툭 던지는 '단문' 위주의 짧은 메시지를 통해 재미를 보았던 박 전 대표의 정치 스타일은 트위터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트위터는 누구나 부담 없이 일상의 평범한 풍경을 담아낼 수 있고, 정치인들이 직접 면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식시키기 때문에 정치와 시민들간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진 느낌을 준다. 시민들과 정치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는 없지만,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짧게 끊어서 단속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트위터의 속성은 이성적 공간이라기보다는 감성적 공간임을 드러낸다. 이 때문에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는 주류 언론에 의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되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냉소의 악순환을 끊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성의 정치를 강조해온 이들이 보수언론, 보수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이 꺼림칙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바로 이성과 토론에 기반한 정치가 아니라 감성정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는 있을지언정 심도 깊은 토론을 하지 못하는 트위터의 속성상 트위터를 아무리 활발하게 사용한다 하여 이용자들의 정치적 역량이 제고될 리 만무하다.

일상의 정치는 참여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트위터만으로는 참여민주주의를 넘어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제는 더 많은 참여뿐만 아니라 더 깊고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본격 아이폰과 트위터에 관한 안진보적인 글

김슷캇 개드립 3단[7]
@kimstcat

칭송받는 자

언제나 새로운 경향은 칭송받는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패션, 하여간 뭔가 새로와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상할 정도로 언론과 정치인에게 칭송받는다. '신세대' 니 'X세대' 따위의 세대지칭이 그랬고, 월드컵 해방구의 전위부대 '붉은 악마'가 그랬고, PC 통신이 그랬고 인터넷이 그랬고 싸이월드가 그랬고 블로그가 그랬고 지금은 트위터와 아이폰이 그렇다. 특히 새로운 경향에 대한 정치인들의 설레발은 헌신적이기 짝이 없다. 그것들이 딱히 담고 있지 않은 정치적 함의를 어떻게든 부여하려 애쓰며,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인증을 받으려는 노력들은 그야말로 눈물겹기 짝이 없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트위터('SNS'가 아니다)와 아이폰('스마트폰'이 아니다)에 대한 정치인들의 찬양은 손발이 오글거리다 못해 지느러미로 퇴화될 지경이었다.

---

7 http://stcat.egloos.com/

세련되고 위대한 신기술을 찬양하기 위해 동원된 온갖 수사들, 소통, 진보, 위력, 집단지성, 정보 등등등. 뭘 해도 물어뜯고 싸우기 바쁘던 우익과 좌익이 이 새로운 경향 앞에서는 합심해서 찬양했고, 의원실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이 "자네, 트위터라고 아나?" 라는 소문까지 들렸다. 특히나 진보정당들은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트위터와 아이폰에(귀찮으니까 줄여서 '아트' 라고 부르자) '진보적으로' 뛰어들었다. 지방선거 훨씬 전부터 당원들에게 트위터 가입을 종용하고, 홈페이지에 트위터 배너[8]를 달고, 스마트폰 당장 안사면 큰일날 것처럼 난리를 치고, 당직자들에게 아이폰을 사주네 마네 하는 이야기를 보도자료[9]로 뿌리고. 무비판, 무개입적으로 아트에 대한 충성심을 전위적으로 실천한 진보정당들에게 애플과 트위터에서 감사패라도 줘야하는 거 아닌가 싶다.

사진 1: 간지 쩌는 진보적 홈페이지의 필수 합성요소?

진보정당만? "진보적 언론" 들이 보여준 충성심은 또 어떤가? '진보' 를 어찌되었건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언론매체들, 민중의소리, 레디앙, 레프트21은 하나같이 대문에 트위터 위젯을 달았다. 참 재빠르기도 하지. 이중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이라는 슬로건을 달고 있는 민중의소리(귀찮으니 앞으로 민소라고 하자)는, 대표선수답게 다른 매체들보다 훨씬 급진적인 트위터 사용방식을 보여준다. 민소의 트위터 담당자가 하는 트윗을 노출시키는 것도 아니고, 등록된 사람들의 트윗을 자동 실시간으로 대문에 노출시키는 방식. 운이 좋으면 당신은, 민중의 소리 대문에서 누군가의 아침밥 메뉴나 데이트 일정을, 가끔은 연인과의 밀담을 엿볼 수 있다. 아아, 진보적이다! 진보적이다 못해 심하게 빨라서 과거로 워프라도 해버릴 것 같은 멋진 급진성이여! "한국의 진보 대표 언론" 의 1면에서 "한국의 대표 진보정당" 의 두 유력 정치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폰과 옴니아를 들어 보이는 사진을 발견했던 그날, 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멋진 사진을 여기저기에

8 민주노동당은 2009년 겨울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트위터에 빠져봅시다'라는 이미지를 대문 상단에 올려두었다.
9 2009년 12월 1일 진보신당 보도자료

퍼다 날랐다[10]. 물론 사진 아래에 붙은 캡션은 “ㅋㅋㅋㅋㅋ”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우리 애완견에게 칩을 심자거나, 노동자에게 GPS를 달자고 하면 난리를 치잖아. 그런데 GPS가 달린 스마트폰은 왜 다들 사자고 선동하는 거지? 스마트폰의 정보를 좀더 ‘누구나, 편리하게’ 웹으로 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트위터라는 도구는 왜 갑자기 진보적인 무언가가 된 거지? 이거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좋아, 한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말 꺼내면 욕먹기 바빠서 못해왔던 이야길 오늘 다 해보자.

정보기술의 발전은 분명히 사회를 ‘진보’시킨다. 물론 이게 어느 쪽으로의 진보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기술은 그 자체로 정치적 방향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경향에 따라가기 마련이다. 당연하게도,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지배계급에게는 감시사회와 노동밀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기회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무슨 기회가 될까? 아쉽게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왜 모르냐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가속화되는 경향을 우리는 우리 쪽으로 틀려고 시도해보지도 않았고, 틀 수 있는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이 ‘아트’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몇 가지 위험에 대해서도 아무 방비도, 방비하자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운동가들, 운동단체들에게 다가가 “자, 우리 스마트폰과 트위터를 통한 노동밀도 강화와 감시체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라고 제안하면 “자네 왜 이러나”라는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아트는 감시사회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갔고, 결국 도시철도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노동강화’ 사건이 터졌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업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킨 것[11]. 노조는 스마트폰 활용으로 인한 노동강화에 치를 떨었고, 이 사건은 노동운동가들에게 스마트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놀랍게도, 더 이상 이야기 되지 않았다. 그리고 왠지 앞으로도 이야기 되지 않을 것 같다.

---

10 사진은 다음 페이지

11 레디앙, 2010년 3월 29일, “스마트폰 안터지고, 속만 터진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813

물론 언제나 모든 새로운 경향들은, 그것들이 '새로운' 이라는 형용을 달고 있을 때만 진보적 칭송을 얻는다. 시간이 지나고 몰락하는 이미지들, 예를 들어 세대지칭의 상업성이나 붉은악마의 국가주의나 흥신월드의 개인정보 침해 따위는 더 이상 이야기되지 않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렇게 잘 이해하고 선도하던 이들이 갑자기 문외한으로 돌변하기 십상이다.

사진 2: 스마트폰 산 김에 4대강을 트위터로 지키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하셨던 당시 모 진보정당의 대표와 유력 차기 대표. 아이폰과 옴니아니까 좌사우포는 아니고 조삼모사? (아침엔 삼성 저녁엔 애플)

지난날 강가에서 아이폰으로 트위터하던 선구자 지금은 어디 갔음?

왜 '진보적인' 정치인들과 '진보적인' 정당들은 이런 이야기들에 침묵하고 있을까? 왜 고민하거나 이야기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가? 생각을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럴 리가! 우리에겐 '모바일 정당' 을 앞세우고 기술 대응에 뛰어든 진보정당도 있고, '좌사우포' 의 얼리아답터 진보정치인도 있지 않은가? 심지어 진보정당들이 자랑하는 수많은 진성당원들 중에는, IT 종사자들도 차고 넘치지 않던가? 나는 이걸 '미필적 고의' 라는 말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아직 이야기 되지 않은 것들, 대중이 '진보적 자세인지 아닌지' 아직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들에 대한 고의적 '모른체' 말이다. 세련된 '아트적인' 열풍 속에서 대중의 행동반경에 뛰어들고 또 운동가들에게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권장하는 행위는 진보적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은 라이프스타일이다.

지난 촛불정국에서 “오오오 집단지성” 운운하면서 해석과 개입의 의무를 방기하고 “대중이 하는대로 무작정 따라가면 옳다능!” 이라는 결론의 장문을 뱉어대던 지식인들을 기억하시는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 대로 하는 것이 옳다면서 수도권 줄 사퇴로 민주당에 몸을 던진 우리의 민주노동당을 기억하시는지? 대세만 따라가면, 입만 다물고 있으면, 표가 올라갑니다! 왠지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근거는 없지만요! 진보적 정치인들이 아트에 빠진 것도 결국 마찬가지 아닐까? ‘대중’ 이나 ‘국민’ 보다는 적은 수의 무리지만, 네트워크의 주민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 아닐까? 숙명처럼 짊어진 ‘촌티나는 진보’ 라는 굴레를 벗고 ‘세련된 진보’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일까? 우리 당대표는 얼리아답터[12]라능! 우리 당원들은 트위터도 많이 한다능! 그리고 결국 얻어낸 ‘세련된 패션좌파’ 의 이미지에는 부록으로 ‘유연함’ 도 딸려온다. ‘유연한 진보’ 멋지지 않은가? 모두가 얼마나 이 타이틀을 부르짖었던가? ‘(위기에) 유연한 진보’ 를 말이다.

사진 3: 한편 2009년 BBC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단문메세지 중 8.7%만이 전파할 가치가 있는 소식으로 나타났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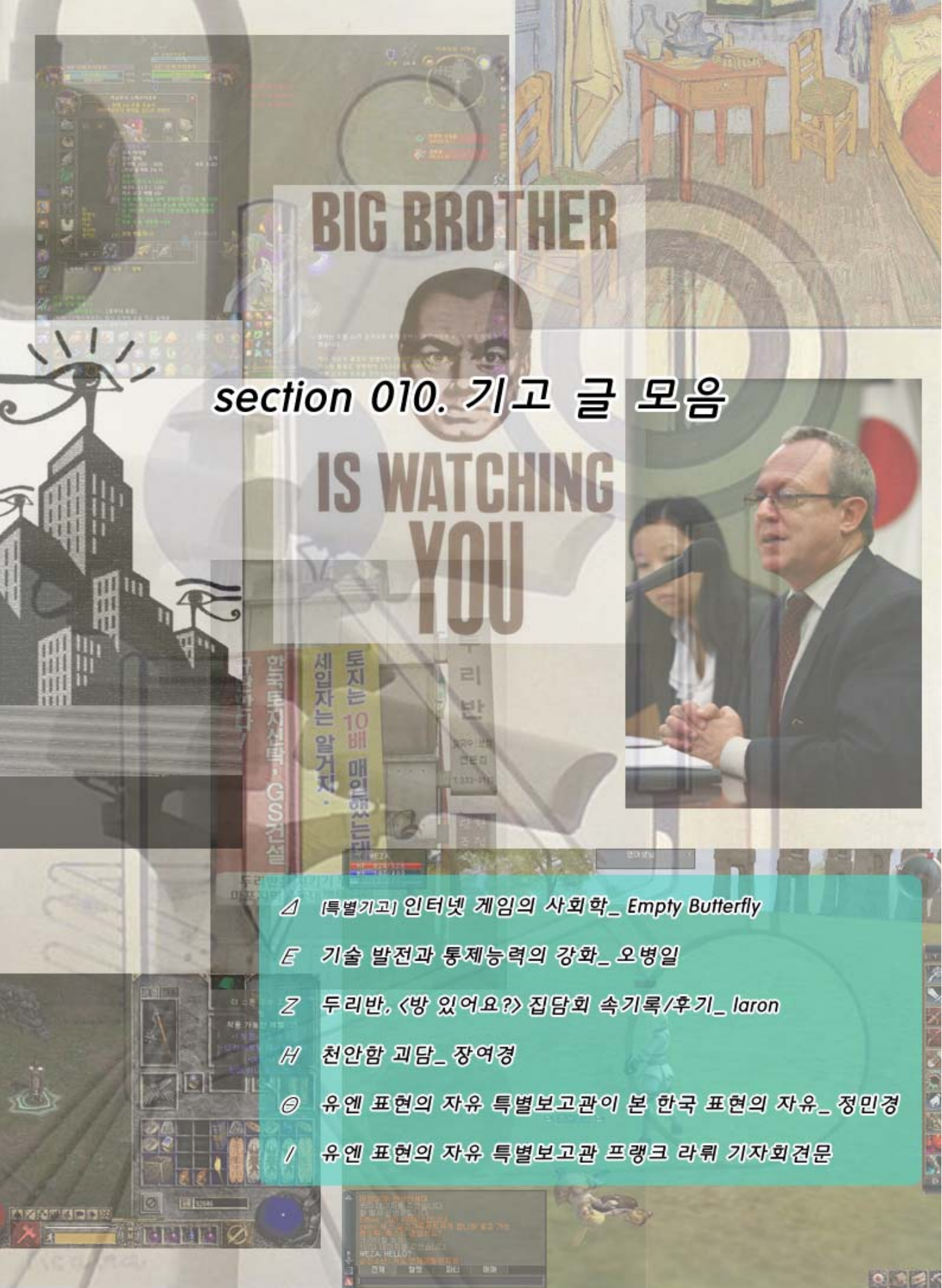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살 수는 없다. 좀 유연해야지 정치도. 정치인이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그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건 시장에 협력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조차 없다. 게다가 어찌되었건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1인 1스마트폰 시대로 돌입할 것이고, 트위터를 통해 퍼져나가는 수많은 개인정보에도 무감각해질 것이다. 곧 그것은 “당연한 일” 이 된다. 우리는 모두 상표를 먹고, 상표를 마시고, 상표를 타고 다닌다. 개인이 상표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진보적 정치인이건 활동가건, 아이폰이나 트위터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절대로 내가 트위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다. 진짜다. 좀 더 나아가, 아트에 무비판적으로 빠져들자고 선동하는 것도 괜찮을지도 모른다. 고민해봤자 대안 같은 건 안 나올지도 모르고, 어차피 나빠질 거 좀 더 일찍 나빠지면 안 될 거 있나? 정치라는 게 타협도 좀 하고 그러는

12 그러나 노동밀도 강화라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얼리 아답터인지 얼리 버드인지.

거지, 옛 말에 악마와도 타협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필요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래서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궁금한 건 그거다. 뭘 얻었는지 말이다. 트위터에 뛰어들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팔로우하고, 가끔은 정모를 하고. 어차피 그 후보를 찍을 사람들끼리 누굴 찍으라고 RT를 날리고, 어차피 투표하고 온 사람들끼리 투표 독려 트윗을 날리고 하면서 버린 것들만큼 얻은 것이 있느냐는 말이다. 트위터에 대한 기사가 더 많이 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트위터 사용자가 더 늘어나는 효과들 외에 얻은 게 뭔지 말이다. 좀 무섭게 말하면, 사회를 '반동' 시킨 만큼 '진보' 시켰느냐고. 소통과 정보화를 부르짖으며 아트에 뛰어들려던 시도는, 그 시도 자체는 분명히 성공했다. SNS에 매우 진보적인 찻잔들이 만들어졌고 사회 전체의 아트 추수주의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었다. 슬슬 지금쯤이면 평가해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시도 자체는 분명 성공했는데, 기대효과는 얼마나 얻어냈는지 말이다. 왜들 말하지 않는지, 왜들 더 이상 소통이니 집단지성이니를 앞세워 얼리 아답터가 되자고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추측을 해보려 해도 짐작이 당최 가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만큼 진보적이지도 않고, 얼리 아답터도 아니라서. 아아 아이폰 갖고 싶다.



section 010. 기고 글 모음

ㅿ [특별기고] 인터넷 게임의 사회학_ Empty Butterfly

ㄸ 기술 발전과 통제능력의 강화_ 오병일

ㅈ 두리반, <방 있어요?> 집담회 속기록/후기_ laron

ㅢ 천안함 괴담_ 장여경

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_ 정민경

ㅣ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문

[특별기고] 인터넷 게임의 사회학

– 현실 세계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사이버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다.

Empty Butterfly
kafka63@hanmail.net

많은 우려 속에 점증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 중독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아니다. 물론 과거 어느 시기에도 지금과 같은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 본성에 대한 식견과 인간 사회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유희성과 수많은 익명성을 향한 도피 경향, 몰입에 수반되는 광적 집착, 우연성과 필연성의 적절한 조합에 따른 (운칠기삼運七技三으로 표현되는) 진정한 의미의 행위예술 대한 풍부한 사례들을 알려준다. 예수의 사도들은 다락방에 모여 그들의 중책을 맡길 자를 선발할 때, 이성과 객관적 자료들을 사용하기 보다는 제비뽑기를 하였으며, 동굴 벽화에 그려진 도박에 열중하고 있는 원시인들은 인류 최초로 분배에서 소외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이제 논의를 좁혀서, 어느 젊은 부부가 자신들의 갓난아기에게 음식을 주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일부 외톨이들이 방구석에 쳐 박혀 어미 아비도 몰라보게 만들었다는, 수많은 백수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망각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회인, 기업인, 지식인, 문화인들이 혀를 끌끌 차며 도대체 왜 이 따위 것

들에 목숨 걸며 달려드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 MMORPG (Massively Multyplayer Online Role-Playing-Game)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게이머들이여 침을 뱉어라.

- 게임(Game)은 일종의 부정이며, 그것으로의 중독은 부정적인 힘의 표출이다.

역할 분담 놀이가 교육학적으로 지니는 상호 협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따위는 잊어버리자. 교육은 본질상 긍정적인 것이었고, 제도 속에서는 **언제나** 긍정적인 것이었다. MMORPG가 지니는 문자적인 의미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도 생략하자. '핸드폰(Hand-Phone)'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핸드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것처럼.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개인적인 지평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도 의미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다른 이들이 많이 다루었고 다룰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MMORPG가 부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조리다. 어떤 종류의 부조리인가. 기회와 분배의 불평등, 배경에 따른 사회적 선입견, 자연이 허락한 다양성에 대한 인간들의 조롱이다.

-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간단한 MMORPG에 대한 사전 분석을 가해 보자.

MMORPG는 크게 3가지 체계로 나뉜다. 1. 기술체계(Technical System) 2. 생산체계(Producing System) 3. 소통체계(Communication System). 기술체계는 게임을 시작할 때,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종족과 직업들, 사냥을 통해 성장하면서 습득하는 사냥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생산체계는 게임 안에서 주로 사냥 등을 통해 게임에 필요한 재화(아이템, 경험치 등)들을 습득하는 과정을 일컬으며, 사냥방법과 행위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소위 말하는 Player Killing의 경우에도 이를 통해 어떠한 재화의 직, 간접적인 소득이 있다면, 이 또한 생산체계에 편입된다. 마지막으로 소통체계는 게임 안에서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개발자 대 플레이어', '게임 서사 대 플레이어' 등을 아우르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직 · 간접적인 소통행위를 가리킨다.

폐인양성게임이라는 비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액티브 유저 850만명,
전세계 MMORPG유저 62%가 플레이 하는 블리자드사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 플레이 화면.
(사진은 본 글의 특정 내용과 상관 없음을 밝혀둡니다)

세상을 닮은 게임, 그러나 세상과 반대로 돌아가기에 몰입된다.

- 게임에 참여한 한 인간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

참여자는 먼저 종족과 직업을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선택하게 되며, 종족과 직업에 대한 불평등은 게임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개발자들의 조정을 거쳐 제거되어진 상태이다. 또한 모든 참여자는 동일한 조건과 기반에서 생산 활동을 시작하여 성장하게 마련이다. 물론 늦게 참여한 자와 먼저 참여한 자와의 불평등, 오프라인 상에서의 배경이 있는 참여자와 없는 참여자 사이의 불평등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는 신규 참여자의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기에 현실 사회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강제조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 참여자와 신규 참여자가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개발자가 결정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게임의 생산체계 속에서 거의 절대적인 노동가치론의 실현을 맛보게 된다.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많은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장시간 사냥을 해야만 계정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의례 만들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은 투하 시간대비 획득 경험치를 정비례 관계에 놓이게끔 만든다. 또한 투하 시간 대비 경험치 획득량을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생산도구-아이템 역시 요행이나 한건으로 획득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게임 외적인 부분에서의 아이템 해킹이나, 현금거래 등을 이야기 하자면 양자의 양상은 좀 다르다. 아이템 해킹은 게임 존속의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금 거래는 오히려 게임을 더욱 확대 발전시킨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도 위의 논평은 유효하다. 아이템의 현금성은 그 자체로 노동가치론의 배경이 되지만, 아이템 해킹에 의한 무노동 획득은 게임의 존속을 위협한다. 개발자간 경쟁이 심화되면 해커를 고용해 상대 게임에 아이템 복사 프로그램을 유통시키기기도 한다는 공공연한 이야기들은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디아블로2에서 화폐로 유통되전 조던링의 스크린 샷.
디아블로2는 조던링 복사로 인해 게임경제의 붕괴 이후 급속한 게이머 이탈로 몰락의 길을 걸었으며,
이후 블리자드사는 복제된 아이템 삭제 및 계정 블럭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사진은 본 글의 특정 내용과 상관 없음을 밝혀둡니다)

그러나 게임은 본질적으로 우연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일부 시스템에는 우연적인 요소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역사 참여간의 평등을 저해시키는 측면이 아니라 증가 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카오스(Chaos)의 의미는 평

등” 이라는 조커(영화 “배트맨”의 악당)의 멘트는 참으로 사실이다. 즉, 생산체계에 일부 사용되기도 하는 우연성은 기본적인 게임 경제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일정한 자격 요건이 충족된 참여자들은 극악의 확률로 기상천외한 아이템을 손에 놓을 수도 있게 되는데, 이는 누구나 다 일정 요건만 충족된다면 획득 가능한 꿈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은 게임 경제 안에서 건전하게 이룩될 수 있다.

일찍이 루소가 우리에게 알려준 바에 의하면, 인간의 불평등은 사회적인 기원과 자연적인 기원을 지니고 있는데, 자연 역시 인간에게 평등하지 못하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고 강인하고, 뛰어난 지능을 지니고 태어나는 반면, 어떤 이들은 게으르고 방탕하며, 추하고 어리석게 태어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가장 현명한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보다 백배, 천배, 수 만 배 더 뛰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게임 안에서는 가장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게임 참여가 가능한 자라면) 사이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 누구나 노력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리니지2 클로즈 베타 당시 610명을 PK(Player Kill)하고 GM(Game Master)에게 강제적으로 캐릭터를 삭제 당한 WEZA[13]. 이후 NC소프트는 리지니2의 PK조항을 변경한다.
(사진은 본 글의 특정 내용과 상관 없음을 밝혀둡니다)

모든 사이버 현상들이 그러하듯이 MMORPG 역시 익명성의 논의에서 제외되지는 못한

13 http://blog.naver.com/drakedog/90084246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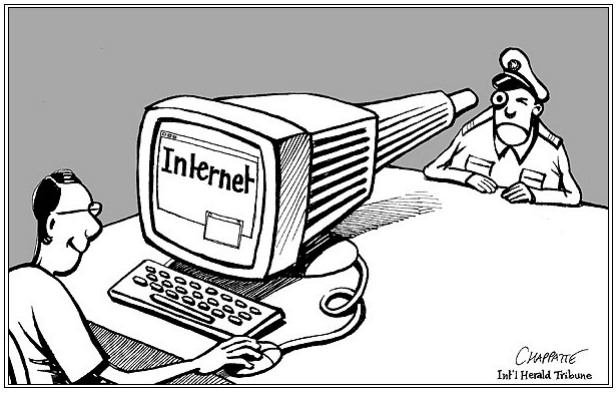
다. 그러나 여기서 '익명성' 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은데, 하나의 게임 캐릭터(한 사람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하여도)는 하나의 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생성된 후 동일한 이름으로 유지되는 자기 동일성을 가진 역사를 지니게 되며, 존재론적으로 오프라인에 위치한 인격에 의존한다. 일단 게임 참가자가 게임 안에서 자신을 토대로 한 인격을 (자신의 어두운 면만을 투영시켜 만들었던 밝은 면만을 투영시켜 만들었던 간에) 생성시키게 되면, 그것은 기존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발언권을 지니게 된다.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이버상의 인격에 몰두하는 원인을 이를 통해 음미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은둔형 외톨이는 수많은 이름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면들을 발산하는 점과 대비시켜 볼 때, MMORPG는 주로 몇몇의 이름으로 나누어지는 통일된 인격으로 인정투쟁을 벌이는데 몰두한다.

현실은 게임,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임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존재를 인정받고 해방감을 맛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중산층과 지식인들을 열외로 한 사회적 취약 계층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들은 여기서 얻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좌절하고, 분노하고, 포기했다. 아니다.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들은 포기하지 못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서 저기에 몰두한다. 부정적인 힘은 부정적이지 않으며, 그것은 가능성을 담고 있는 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정의를 원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법칙 "일한 만큼 번다"를 실천하고 있는지, 게임방의 죽돌이들과 한 달에 한두 번 외출하는 인터넷 폐인들과 직장이 끝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내 친구를 보면 알게 된다. 우리 사회를 하나의 게임으로 환치시켜본다. 누구를 위한 게임인가. 무엇을 위한 게임인가. 이런 질문 따위는 필요 없다. 한 가지만 묻는다. **"이 게임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시장원리로 말하건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게임은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확률이 제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피와 살로 이루어진 게임을 부정하고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에 이 게임은 유지되고 저 게임도 유지된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힘들이야 말로 우리 미래를 조금이나마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기술 발전과 통제능력의 강화[14]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활동가
@antiropy



지난 2008년, 검찰은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 100여 명의 최장 7년치 전자우편을 통째로 압수해 열어보았다고 한다. 편지라는 극히 사적인 대화 조차도 한번 기록된 이상, 절대적인 보호를 보장받을 수 없다. 아예 전자우편 기록 자체가 없었다면 압수수색 영장인들 의미가 없었을 것을.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기록된다. 그리고 기록된 모든 것은 사후에 추적, 열람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하면, 통제 가능해진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욕망한다.

14 <위클리 수유너머>, 2010년 4월 제14호에 실린 글입니다. http://suyunomo.net/?p=2935

잠재적 범죄자

지난 4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하반기 감청 통계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자못 충격적인데, 2009년 하반기에 통신사에서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을 한 전화번호나 인터넷 IP주소 등 '통화내역'이라고 보면 된다) 건수가 무려 15,778,887건으로 전년도 대비 67배(6,564% 증가)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그동안 압수수색 방식으로 이루어진 기지국 수사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방식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2009년 하반기에만 1,257건의 기지국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한 수사당 통상 1만 2천개의 전화번호가 제공되었다고 밝혔다. 기지국 수사란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압수하거나 제공받는 방식의 수사를 의미한다. 문제는 그것이 압수수색 방식으로 이루어졌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방식으로 이루어졌든 특정 시간에 범죄 현장에서 통화를 한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로서 용의선 상에 오른다는 것.

기지국 수사뿐이 아니다. 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모든 통신 기록은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버에 기록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오로지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 기록을 '일정 기간'(예컨데, 통화기록은 12개월, 인터넷 로그기록은 3개월) 보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행 통비법은 시행령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보관 기간 및 처벌조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통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모든 행위와 대화가 기록되는 정보사회에서 그것은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력화 된다. 내가 왜 범인인지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정당한지를 내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내가 비록 그 범죄 현장 근처에 있기는 했지만, 나는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그 자리에 있었으며 범죄와는 전혀 무관함을 변명해야 하는 것이다. 살인, 강도와 같은 심각한 범

죄와 관련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 CCTV에 찍힌, 나와 같이 있던 그 남자가 애인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해야 할 수도 있으며, 회사 컴퓨터로 접속한 사이트가 업무와 연관된 것임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다. 근무 중 한 시간에 다섯번이나 화장실에 간 것에 대해서는 '배탈이 나서'라는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할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 모니터링 될 수 있다는 것을 내면화한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통상적인 룰(그것이 법이든 통념이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하게 된다.

통제 능력

지난 해 12월 29일에는 (예산안 날치기 통과 문제에 가려 묻혀버렸지만) 범죄자 유전자 DB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피의자, 소년범, 범행 현장에서 입수한 시료(우연히 범죄 현장에 머물렀던 사람) 등도 입력 대상이 된다. 이미 경찰은 2004년부터 장기미아(미아 부모뿐만 아니라, 치매 노인 등의 유전자도 포함)에 대한 유전자 DB를 구축, 운영해 오고 있다. 계속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유전자 DB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지 말란 법은 없다. 범죄자 유전자 DB를 앞서 구축했던 영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은 전 국민 지문날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가. 전 국민의 유전자 DB가 구축되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흘리고 다니는 자신의 흔적들(예컨데, 머리카락, 컵에 남은 입술자국, 타액이나 정액 등)은 모두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 조각이 된다. 아마도 (유전자 분석 비용이 충분히 저렴해진다면)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에 대해 집으로 과태료가 날라올 지도 모른다.

기술은 통제 능력을 강화한다. 실질적인 통제는 통제자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엄혹한 독재정권 시절보다 현대의 민주적인 정부가 보다 세심한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 능력을 갖고 있다.

지난 해에는 국정원이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이 2008년 6월부터 2개월 동안 집과 사무실의 인터넷 이용 내역 및 핸드폰의 모든 통화, 문자 송수신 내역을 국정원에 의해 감청당한 것이다. 이를 '패킷 감청'이라고 하는데, 메일, 메신저, 웹서핑 등 당사자의 모든 인터넷 이용 행위를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면) 원격에서 그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명시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은 '실시간 위치추적'도 편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미래의 통신사실확인자료'(원래 통신사실확인자료란 과거의 통신내역이다)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해왔는데, 이동통신사업자가 매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단말기와 통신하는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 SMS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에만 9,647건에 이르며, 2년 반 동안 4만 건이 넘었다. 우리 사회에서 추적당하지 않고 숨어살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감시의 자발적 수용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원격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조금 극단화시킨다면, 텔레파시를 통해 서로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하는 양 당사자의 권력 관계가 불평등하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내 눈빛만 봐도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해보자.) 이는 권력자의 통제 능력의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서 권력자는 국가 권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사회의 모든 미시적 권력 관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직원들의 이메일, 메신저, 웹서핑 내역을 모니터

링하는 회사에서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집 앞에 CCTV를 설치하는 사람이나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해 자녀들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부모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 스스로 감시 시스템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모든 감시 시스템은 '당신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는다. 위험한 유전자를 지닌 타인의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다. 범죄 예방 CCTV 의 도입 여부를 묻는 설문에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오히려 더 많이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자녀들의 지문 수집이나 위치 추적 서비스에 기꺼이 가입한다. 항공기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알몸 수색기'는 당연히 감수해야할 것이 되고, 흉악한 범죄자를 통제할 수 있다니 유전자 DB나 전자팔찌의 도입에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감시 시스템/정책들의 효과가 업체나 정부에 의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지언정, '안전에 대한 욕망' 자체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감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공동체가 그것을 보장해주리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어두컴컴한 길거리를 지날 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CCTV가 더 위안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감시/통제 시스템이 '더 안전한 사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혹은 안전하지만, 숨쉬기는 힘든 사회가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술 자체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통제와 감시의 강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소 추상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강화되는 기술의 통제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더 많은 민주주의, 그리고 감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공동체의 복원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리반, <방 있어요?> 집담회 속기록 / 후기[15]

laron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picotera

두리반. 2010. 05. 05.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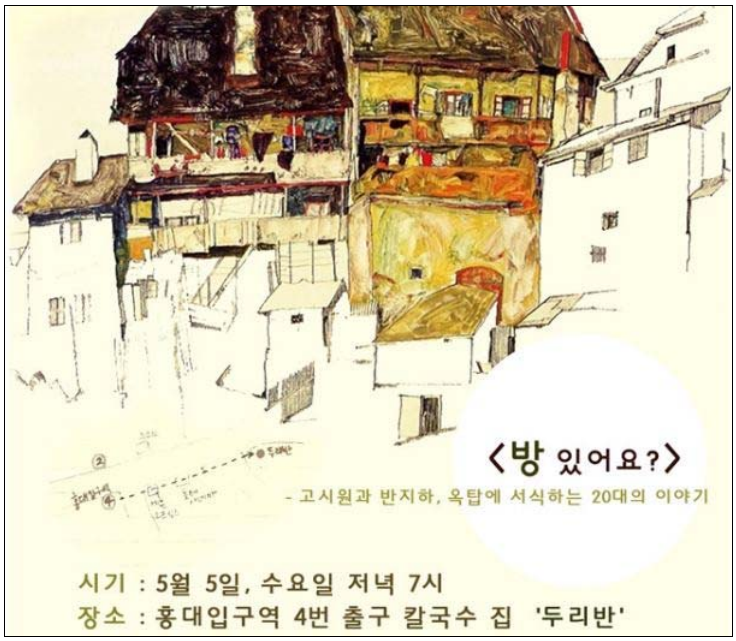
프랑스 옛 영화에 나오는 것 처럼 어둑한 조명, 후덥한 분위기, 다양한 젊은이들이 모여 공간을 팽팽하게 만든 상태.

노회찬, 모두발언 : 오늘 주제가 주거문제 관련. 나도 서울에서 산 지 40년. 이사만 18번. 내 소유의 집이 없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 못할 것. 편안하게 산다는 개념의 주거, 집이라는 개념, 쓰라린 경험이 많기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누는 자리가 될 것. 감사하다.

---

15 문화연대 <진보복덕방>, 2010년 6월 제28호에 실린 글입니다. http://www.culturalaction.org/housing/

유채림(두리반) : 고맙다. 오늘로서 130일째 농성 중. 철거농성 오래 하다 보니 분이 쌓이고 해소하고 싶어 말이 많아진다. 시간제한 2~3분. 어제 제가 버라이어티 토크쇼라는 성폭력 피해자 다큐물을 보았다. 영화를 보는 내내 철거민이 성폭력 피해자와 다름없다는, 교차되는 아픔을 느꼈다. 철거싸움 당시 밟아오는 고통을 느꼈다. 떼쓰는 이로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 내막을 모르면서 버티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외출도 쉽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를 버텨가며 한 사람, 두 사람 힘을 합해가며 오늘까지 힘을 얻어왔다. 주거문제 때문에 생기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 제도화된 기존 틀을 깨고 모든 것을 상상 할 때 주거문제의 돌파구가 생기고 철거싸움이 없는 세상이 온다. 오신 젊은 분들의 상상력으로 메워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영화 2편 상영 - <방 있어요?>, <자기만의 방>, 상영 후 토론 시작

토론자 : **우석훈, 한윤형, 심민경<자기만의 방>, 이택광, 석보경<방 있어요?>**

이택광 : 다큐를 좋아한다. 〈방 있어요?〉 감독 특유의 쉬크한 느낌, 절박함이 느껴져. 〈자기만의 방〉과 대비. 〈자기만의 방〉 디테일하게 20대의 요구 반영. 〈방 있어요?〉 대안을 주려고 함. '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 〈자기만의 방〉 버지나아 울프 소설 제목. 그

가 쓴 글에 보면 '나를 정립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방을 갖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 당시 여성들은 방이 없었다. 두 개의 다큐를 보며, 한국은 아직 19세기를 벗어나지 못해.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질 조건을 찾는 것이 근대국가의 이념인데, 국가가 그런 것을 정확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해.

인도를 가 보았다. 인도에서 교수를 하는 이들은 대저택에서 산다. 낭만적인 인도는 없다. 인도는 개판이다.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부촌으로 간다. 부촌으로 가서 골목골목에 산다. 뭐 하나 주어 먹으려고. 교수가 "요새 동네 인심이 박해져서 그렇다"고 하기에 "공공투자를 안하고 주거환경을 마련 안하니 그런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 했다. 개인적으로 인도는 막가는 상태라 생각.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는 우파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사회가 불안하고 전복하게 하는 것을 왜 좌파가 고민해야 하는가? 이상이다.

심민경, <자기만의 방> : 더운데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 반갑다. 처음 기획 당시 '방'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과 이런 식으로는 나누지는 못해.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어. 서울로 상경해서 유학을 했는데, 방을 계속 옮기면서 부유하는 느낌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 다른 이들과, 스크린에 걸어서 같이 공감하고 싶었다. 우리가 느끼는 감수성을 엮고 싶어 만들었다.

석보경, <방 있어요?> : 미디액트에서 독립다큐 제작과정을 들은 세 명이서 같이 만든 작품. 수료작을 만들며 생각 한 것이, 20대와 불안이라는 키워드로 만들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 주제가 방으로 꽂히게 되. 방을 주제로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작품이 되었다.

우석훈 : 제가 보는 다큐가 1시간에서 2시간 짜리 재미없는 다큐들이 많은데, 10분짜리 다큐를 보고 무척이나 놀라. 제대로 볼 준비를 했더니 그냥 끝나버려. 20대 방살이 등 여러 고민을 했는데, 영화 자체를 놓고 보면 〈방 있어요?〉는 너무 직설적이지 않은가 했다. 그냥 재미있게는 보았는데, 직설법을 쓰지 않고 우회적으로 돌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기획들이 이어져서 다각적으로 비추었으면 하는 계기가 되는 다큐가 되었으면, 시제품을 본 느낌.

〈자기만의 방〉 한나라당 민주당 아주 나쁜놈들. 50세 넘은 할아버지들 너무한 것이다. 2년전에 본 빠리에서 벌어진 일.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올라갈 때 학생들이 교육부장관에게 달려가 학생아파트를 요구했었다. 우리는 이런 상상도 못한다. 문제가 어디서 만들어 진

것인가 하는 것과, 누구에게 이야기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우리끼리 얼굴 봐야 술만 먹게 될 듯. 보고나서 술 땡기는 다큐 보다는 보고 나서 돌이라도 들고 싶어지는, 그런 미학적 고민을 했으면.

한윤형 : 더운데 저희만 물 마셔서 죄송하다. 개인적으로 다큐 두개 다 재미있게 보았다. 별다른 코멘트 할 것은 없다. 〈방 있어요?〉의 경우 20대 일반의 불안을 이야기 하려다 방으로 축소되었다 했는데, 그래서인지 왜 20대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핑계를 했던 느낌과 비슷하다. 우리가 대답을 안 가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보여주고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계층적으로 생각 할 때 〈방 있어요?〉의 등장인물이 더 많이 떠도는 상황이었고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각자의 상황이 있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이야기 안하고 본능적으로 위아래로 판별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다.

대전에서 올라와 살았다. 처음 올라올 때 좋았다. 부모님이 보증금 대 줘 거기서 살아. 집이랑 연락을 안 하고 지낸 2년간... 비교는 하기 힘들듯. 지금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굉장히 잘 살고 있는 편. 어머니가 하이마트에 데려 가실 때 '아. 거미줄에 걸렸구나.' 자본에 걸리면 댓가를 치러야 한다. 동생은 “우리집이 가난해서 못살겠다” 라고 라고 한다. 지방학생들이 더 잘산다고 한다. 같이 커피를 마시면 밥을 못먹으니 ...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끼리끼리 나뉘어서 잘 못 보는 부분들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가 고민.

심민경 : 일단 우석훈 선생님 평에 감사드린다. 집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집이 주는 감정들을 이미지로 담아보고 싶었다. 〈방 있어요?〉와, 〈자기만의 방〉이 이런 식으로 읽힌다는 것에 놀랐다. 자취라는 시간을 통해 등장인물들이 자신을 정리했고 그것을 담았을 뿐이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부산으로 가서 영상작업중. 어쨌든 서울에 있다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한 숨 돌리게 되는 것인지, 서울의 삶이 배어 든 채로 살게 될 것인지... 저 자신과 등장인물을 지켜 볼 예정.

우석훈 : 우리가 보는 문제의 기원이 제 생각에는 DJ마지막 해에서 노무현 초기에 논쟁이 있었다. 서울시에서 계획을 할 때, 2005~6년에 인구가 줄 것이라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집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 대답은 '주상인구'였다. 서울시에 낮에 상주하는 인구가 많으므로 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래서 노무현 초기에 건물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핵가족화가 진행될수록 그래서 집이 늘 것이라는 거다. 그런데 핵가족화 되는데 왜 40평 아파트를 늘리는가? 앞으로 20대는 점점 더 가난해 질 텐데. 서울시는 한

두명이 살 집은 다 사라지고, 하숙집도 많이 사라졌다. 집은 많이 지었지만 여러분을 위한 집은 없다. 강남을 제외한 몇 군데는 슬럼으로 바뀔 것이다. 부동산 자본들은 그냥 이를 풀어주지도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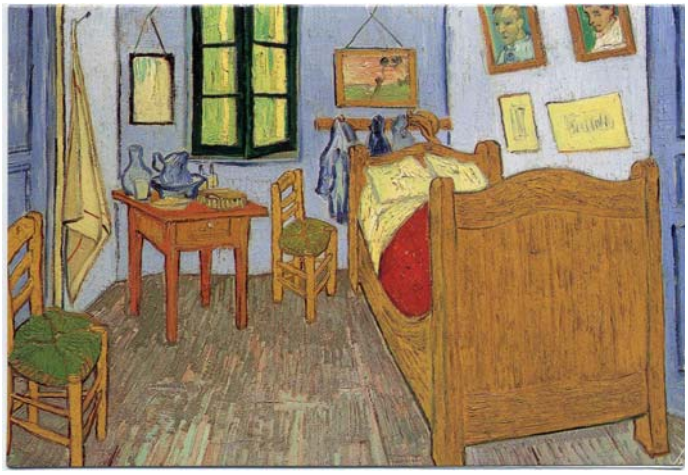
뉴타운 개발 시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최종 결정은 지주들만 한다. 입주자에게 공영개발에 대한 투표권은 있지만, 의사결정권은 없다. 세입자는 없는 것으로 치는 것이다. 핵가족화되어 나온 20대에게 누가 묻는가? 쓸데없는 집은 많이 지어지고 사회적 집은 없는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전세는 없어지고 전세가 일반화 될 것이다. 월세는 전세보다 비싸다. 총 소득이 없는 경우 유럽에서는 월세보조금을 준다. 우리도 사회적 집과 월세보조금으로 나가야 한다. 여러분들이 방어선을 치지 않으면 계속 빼앗길 것. 여러분들이 취직하면 주급제가 될 것. 어디서 방어선을 쳐야 하는가? 제가 보기에 3년째 밀리고 있다. 스쾃 – 빈 집 무단점유, 유럽에서는 인권 차원에서 한 달 정도 스쾃하면 인권 차원에서 전기 정도는 넣어준다. 구로에서 예술가 스쾃이 있었다. 예술가들이 전위적으로 스쾃을 하며 문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막든 못막든 이런 식으로 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택광 : 20대라고 다 20대가 아니다. 보증금을 받을 20대와 아닌 20대가 있다. 한국에서 집구하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홍세화 선생님이 2년 반만에 전세 갔다 하는데, 나는 6년 걸려 변두리에 갔다. 20대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는 것. 강남에 가면 쪽방이 엄청 많다. 강남에는 강남에서 일하는 분들이 산다. 출퇴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강남의 수많은 쪽방, 고시원에서 사는 것이다. 20대들은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주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20대. 중산층 이하의 자식들.

왜 한국의 우파들은 그렇게 압박하는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피땀흘려 그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생각은 정말 무섭다. '난 성공한거야' 그래

서 우리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들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 이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대판 싸운 것이 80년대 386이다. 그들의 운동이 굉장한 운동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대학생의 특권을 버리려 했었다. 대단한 결심이다. 의지적 활동이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이 지경이라는 것은, 곧 386이 급진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래들을 만나면 증권과 부동산 이야기 했었다. 요새는 침체라 그저 교육, 자식이야기 한다. 386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기업 현장 노조도 마찬가지다. 회의 10분이면 끝나고 자식이야기 뿐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왜 그렇게 자식에 투여하는가. 한윤형이 이야기한 대로 '자본이 투여 한 대로 댓가를 치러야 한다'이것이 푸코가 이야기 한 자본주의, 인적 자본주의의다. 이 담론을 우파들이 믿고 경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예정이다. 외부에서 충격이 없는 한 성공할 것이라고 우파들은 믿고 있다.



<고흐의 방 Vincent's Bedroom in Arles> V. Gogh 1888. 10

한윤형 :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감정... 그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이야기를 군대 이야기로 환원시키는 더러운 예비역의 본성이 올라온다. 군인들은 습관적으로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한다. 초반에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집에 가기 싫어서. 그런데 나도 상병이 되니 그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은 어디에 있는 집인가? 돌아갈 내 집인가? 그래서 병장달고 물어봤다. 집의 상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었다. 군이란 것은 자식을 2년간 빌려다가 몸 건강히 돌려주는 것이지, 데려가는 사람에게 뭘 해준다는 말은 없다. 천안함도 그래서 부모에게 쩔쩔매는 것. 부모-자식 관계가 성인이 되어 얻게 되는 시민적 권리와 다르게 강력한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집에 대한 상이 달라져.

세대론으로 주거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해. 자본주의 체제가 성장없는 고용으로 들어간 이상, 장년 세대들이 집값을 유지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막차를 못다고 피해를 보고 있다. 핵심은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 했을 때, 새로운 다른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이라는 체제는 지속 유지가 불가능하고, 한계점에 다

다랐을 때 변혁의 지점들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심민경 : 20대 세대끼리 묶이는 담론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이 영화 가편집을 30대에 보여주었다. 30대 그분이 "귀엽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20대로써 이야기 하는 말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엄살로 들리거나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서로 통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집 문제도 20대의 문제로 바라보는데 일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20대 시기를 임시적인 시기로 생각하는데, 삶이란 그렇지 않다. 삶에 임시적인 시기는 없다. 자기가 누리고 싶은 삶의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야.

우석훈 : 제가 만난 대학생과 20대는 당을 싫어한다. 여하간 당을 다 싫어해. 한나라당 열성 당원을 만나고 싶어했는데 그들은 나를 피했다. 민주당 대학생 위원회 비슷한 것이 있는데, 여러번 만나고 일도 해보았다. 정서는 진보신당이고 지도부와 갈등이 있는데, 선거판 꼬붕같은 것. 진보신당도 솔직히 말하자면 비슷해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꼬붕인 형태가 많아.

스위스에 농민당, 운전자당이 있었다. 한국에서 '청년당'이 가능한가? 녹색당보다는 가능할 것. 농민당이나 운전자당은 나중에 극우파가 되었는데, 청년당이 만들어진다면 민족주의나 붉은악마 만나서 극우파 갈 우려가 높아. 만들면 재미있겠지만 위험할수도 있다. 형태가 어떠하든 이야기 하고 싶다. 한나라당 사람 만나 20대 안무섭냐 해도 무섭지 않다 한다. 만민공동회 같은 20대 버전을 하고 싶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생 모임도 다 꼬붕같은 것이다. 자기들끼리 하면 서로 불신하고, 큰데서 하면 꼬붕같아서 하지 않으려 한다. 역사적으로 적절한 예를 찾지 못했다. 내가 20대라면 진보신당 가입 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꼰대를 보고 싶으면 진보신당 게시판을 보면 되. 협동하고 연대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문화적 이질감을 못 넘고 있다. 청년유니온과 민주노총이 서로 만나도 용어/눈빛이 다르다. 20대가 진보신당을 이해하기는 힘들 것. 20대가 진보신당의 게스트인데 진보신당 호스트가 꼰대질 한다.

노회찬 : 20대의 주거문제는 30대가 된다고 해결되거나 피해지지 않는다. 30대의 주거문제로 40대의 주거문제로 다가온다. 이 이야기는 결국 10대도 주거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늘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게 되는 문제이다. 20대 특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숙사-원룸-고시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뿌리를 들여다 봐야 한다. 주거문제의 뿌리로 거슬러 가 보면 교육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자리잡고 있어.

우리보다 앞서서 이 문제를 고민한 나라들이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1. 교육, 2. 의료, 3. 주택의 순서로 접근하고 있다. 주택까지 해결하는 앞선 사례가 스톡홀름의 사례가 있다. 시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현재 스톡홀름의 주택 50%가 시 소유, 공영주택. 이렇게 되면 주택값의 안정은 당연한 것. 이 문제를 시장이 해결 해 줄 것인가? 교육, 의료 마찬가지이다. 이 개념이 넓혀져가면 주택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헌법 35조, 주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교육을 의료를 주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 그것을 시장의 상품으로 바라보는 순간 동물의 왕국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은 상품이 아닌, 상품이더라도 극 소수의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이며 대부분은 공공재로서 이를 바라봐야 문제의 해결이 있다 생각한다.

이택광 : 아까 인적자본이라는 말을 했다. 한국사회는 왜 이런 당연한 것들이 되지 않는가? 이 기점이 1997년 금융위기. 이 위기가 대단히 중요했다. 한국에서는 독일식-유럽식 자유주의가 경쟁했었다고 생각했다. 유럽식이 진보-민주세력이었고, 극우파가 물러난 다음 미국식 세력이 등장한 것. 1997년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우리의 생활방식으로 자리잡게되었다. 갑자기 나온 것이 자기개발담론이고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사회와 시장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시장의 논리로 돌아간다. 해리포터, 호그와트 – 사교육 시장 들어가자 붕붕 날아다닌다. 이런 담론이 한국시장에서 완전하게 빨아들인다. 대형교회, 부동산 등 이 모든 것이 실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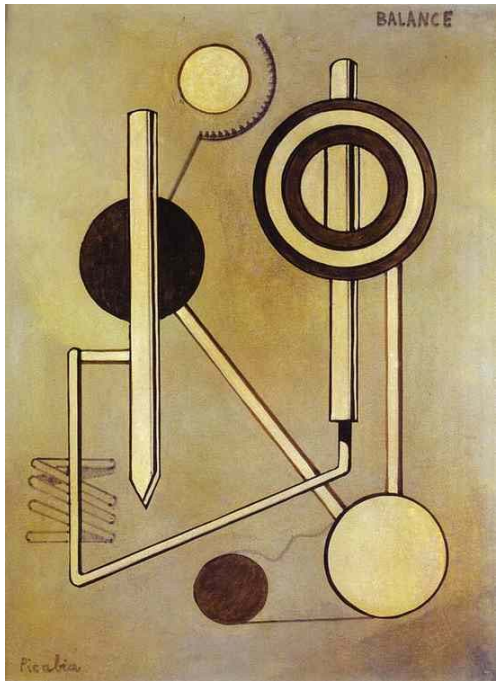
여러분들은 인적자본이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자본을 투여했다. 이른바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신자유주의 교육에 있어서 엄청 중요하다. 이 이데올로기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왜 이것을 따라가는가? 왜 나 자신을 상품으로 내 놓아야 하는가? 시장 논리로 나 자신을 자꾸 측정하는가? 즐거움이 없다. 다른 가치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고, 그래서 이데올로기 투쟁을 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이념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이념적이지 않은 것이다. 천안함을 보라, 정서적으로 20~30대는 우파들에게 등을 돌렸다. 재미가 없다. 조선일보가 미디어법 통과 시켰지만 누가 보겠는가? 재미가 없다. 시장이 주는 즐거움에 너무 매료당하지 말자. 상품이 되자는 강박을 넘어서자. 급진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데올로기 투쟁도 가능.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한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주거권이 중요한 것이다. 20대는 왜 방치되는가? 가공이 덜 된 상품이라는 생각을 바꾸어줘야 한다.

석보경 : 영화를 찍으면서 고시원 거주자의 방을 한 시간동안 구석구석 찍었다. 많이 미안했다. 방의 주인은 '여기가 내 방이라는 것만 모르면 돼'라는 태도를 가졌기에 오히려

방에 대한 접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누구도 불행한 것을 자랑하고 싶지는 않아. 누구나 독립은 생각하기에 이것은 불행의 자랑이 아닌 공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 방이 아닌 너와-나의 함께 쓰는 방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쉽다고 생각한다. 내 방에는 늘 사람들이 와서 술을 마시고 늘 그런다. 내가 주체가 될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 하나 집에 친구와 둘이 산다. 삶의 방식이 다른데 같이 사는건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심민경 : 방의 삶이란 공유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 또한 영상에서 보여주고 싶었다. 20대들 스스로 우리가 너무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동료나 다른 것으로 대치하고 무마하지 말고, 매일 집에 누워있으면 스멀스멀 기어올라오는 불안감. 이 불안감을 기만하는 착각과 기만을 고백하고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개인적이고 말랑말랑한 부분들은 스스로 겪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라 우선은 생각한다.

우석훈 : 투표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미쳐서 자신에게 손해보는 행위를 하는 것. 계급이라는 용어를 분석 할 때 잘 안쓰는 것이 50%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반하는데 어떻게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세대가 70~80%, 여성/남성이라는 개념이 60%정도 설명 해 주는 것 같다. 여성의 주거독립과 20대의 주거독립 이야기가 같이 나왔다가 20대 주거독립 문제는 남아있다.



<Balance> Francis Picabia, 1919

현재 서울시의 구상은 결혼한, 아이를 낳을 20대에 대해서만 정책이 있다. 집 없는 사람들도 한나라당, 민주당 찍는다. 5~60대는 이상한데 찍기라고 하면서 간다. 이야기를 해 보다는 것은 투표가 1차적인 목표고 2차가 정책적인 이야기. 지금까지 선거국면 보면 6월 선거에서도 별다른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다.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든다.

개인적 평가

a. 대안과 의견은 없이 절망만 나누는가? "자 나의 의견은 이렇다.", "웃기지 마라. 뭘 어쩔 것인가?", "진보신당? 그렇다면 그대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자 나는 여기까지 내 의견을 내 놓는다. 더 나은 대안을 이야기 하던가 돌을 들던가."

모여있는 공간/인간들의 팽팽함에 비해 그닥 영양가는 없었다. 한윤형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다른 패널들은 각종 미디어와 SNS에서 뻔질나게 볼 수 있는 "먼나라 남의나라"이야기를 또 반복했다. 우석훈은 자신의 관점과 방향과 진단을 전달하기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진지함이 느껴졌다. 소주 댓병 마시며 이야기 하고 싶었다. 이택광은 '인문좌파' 어쩌구로 좀 씹힐 만 하지만, 씹힐만 한 것은 책 제목일 뿐 Creative하고 소탈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일정 '끕'이 아닌 이상에야 책 제목이야 출판사 편집자 맘 아니겠는가. 기실 발언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온라인 게임에서 자신의 게임 플레이 동영상을 찍고 올리면 굉장한 수의 악플과 욕설이 달린다. "그것밖에 못하냐?"부터 "너이새끼 그 서버에서 니가 한 짓을 안다"라는 식의 발언까지. 그럴 때 "자. 난 이만큼 했어. 니가 만약 나를 욕하고 그렇게 잘났다면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라 너의 실력을 나처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줘"라고 하는 정서가 있다. 적어도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몇가지는 찍고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b. 다큐 두 편 주거와 관련된 20대가 처한 벽들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놓친 점은, 20대는 굉장한 소비주체라는 것. 더욱이 20대가 원하는 주거는 단자(monad)적인 공간이다. 즉 '외부와의 창'이 없는 공간을 20대는 원한다. 스스로 소비하고 안락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점에서 오히려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을 다루었으면 했다.

'우리집에서 늘 친구들이 술먹고 뻗는다. 남들과 뭔가를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쉽다'라는 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연인과 섹스도 해야 하고, 자위행위도 해야 하고, 샤워하고 알몸으로 나와 기분좋게 몸을 털기도 해야 한다. 가끔은 혼자 고요히 책도 읽어야 하고 동시에 비싼 술값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과 오붓이 모여 삶과 예술도 나눠야 한다.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다. 더욱이 그들은 왜 서울에 집착하는가? 라는 질문을 쉬이 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교육, 문화, 관계망 등 결코 서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엇에 대한 시선도 필요하다.

c. 진보신당 조직체, 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민주노동당에서 5년간 꼬붕노릇을 해 본 입장에서 은은한 진보신당 홍보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조금은 회의적이다. 노회찬이 "10대에게도 주택문제는 있다"라고 한 것은 공허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는 생각. "나도 자네들만큼 진보적일세"

d. 흠... 그런 면에서 사실 '빈집' 사람들을 불러다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 집에 대한 고민, 사적/공동체적 공간의 구분, 그 안에서의 갈등등을 들려주어야 하지 않았는가. 돈은 어떻게 하는지. 소유관계는 어떠한지.

20대는 유의미하고 굉장한 소비주체이다. 집을 위해 저축을 하지는 않지만, 문화와 자아를 위해 투자하고 또 소비한다. 이것이 사회의 욕망조작인지 자아의 향유인지를 내가 구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지점이 지적되지 아니하고 주택문제만 이야기 하는 것은 떼쓰는 것 처럼 보인다.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고시공부를 하고 대학을 다닌다. 그 굴레를 보여주어야 한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것은 20대가 처한 상황이자 동시에 20대가 원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웃이란 귀찮고 피곤한 것이지만, 내 공간 안에서 나는 monad가 되어 나의 의지를 실현하고 싶어한다. 여기에 갈등이 있고 파열지점이 있다. 이것을 물고 흔들어야 하지 않을까.

e. 마치며. 좋았다. 분위기가. 무너진 창문을 넘어오는 바람들이 가득찬 젊은이들을 아주 조금씩만 식혀주었다. 할 말 못할말 다 해버리고 머리끄댕이 잡아가며 싸우는 개판 5분전의 파국은 언제야 올 것인가!

아! 두리반에 WiFi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채팅방을 열어 토론회의 발언을 전달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트윗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하고. 나의 집담회 속기록도 바로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두리반에서 수십개의 WiFi가 잡혔지만 전부 막혀있었다. 자물쇠로 걸어 잠근 자기만의 '우리집'만의 WiFi를 보며 이것을 열지도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집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리반에 이웃해 있는 그들이 조금만 열면 두리반은 더 멀리멀리 퍼져 나갈 수 있을 텐데. WiFi를 보안이니 어쩌니 하면서 잠궈놓는 이들을 보면 한심하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불안감만을 신뢰한다.

천안함 괴담[16]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활동가
@dellayk

소위 '천안함 괴담'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말, 경찰과 검찰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괴담으로 지목한 것은 희생장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였다. 5월 11일 동아일보가 〈2008년 광우병 괴담, 2010년 천안함 괴담〉이라는 사설에서 적시한 괴담은 천안함 좌초설 · 기뢰설 · 오폭설이었다. 중앙일보는 5월 25일자 기사에서 합조단 발표 조작설, 미군 공격설, 선거 겨냥한 북풍설, 서해 침투 조작설을 괴담으로 분류하였다.

'괴담'이란 괴상한 이야기, 즉 보통과 달리 괴이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의미한다.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 국내외적으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이 그 원인에 대하여 이러저러하게 추정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위이다. 계속된 말바꾸기로 군과 정부가 신뢰의 위기를 스스로 자초해 온 터였다. 당연한 의혹을 괴담으로 몰아가는 권력은 참으로 그로테스크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실소조차 삼가게 되는 이유는, 수사당국이 정색하고 형사처벌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

16 <미디어오늘> 2010년 7월 7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465

6월 24일 검찰은 천안함 관련 허위 사실을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로 10명의 시민을 형사기소하였다. 이들이 형사기소된 이유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메신저로 친구나 지인에게 "전쟁이 발발하여 긴급징집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중차대하게 발표하며 이들을 대역죄인처럼 다루었다. 친구들에게 전쟁이 났다는 장난 문자를 보내면, 상대 친구들은 물론 무척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친구에게 보낸 악의 없는 장난문자까지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할까?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여 당장 전쟁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 것은 대통령 자신이었다.

지난 5일에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대학생이 구속되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유인물로, 발언으로 정부와 다른 주장을 제기한 네티즌과 학생, 시민, 심지어 전문가들도 줄줄이 형사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사실적 표현에 대해서는 허위의 통신이라 하고, 의견에 대해서는 적을 이롭게 했다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을 들이민다. 사실적 묘사이건 의견이건 간에 정부의 발표에 토를 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수사를 넘어서서 여론 통제에도 적극적이다. 천안함 관련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원회 등 유관기관에 심의 ·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처리하는 엄단 방침을 내렸던 사실이 최문순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경찰청은 포털사이트에 천안함 관련 모니터링 강화 및 삭제를 요구하고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것이 검열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경찰의 방침에 부응하여 천안함 관련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있다. 통신심의규정 제8조 제3호 아목에 명시되어 있는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심의 과정에서는 심지어 이들 게시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사당국과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검열을 자행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 공동체의 정부에 대하여 어느 한도까지 비판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한도가 거의 없다. 민주주의는 때로 국민의 여론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권을 넘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일컬어진다. 이 정부 들어서는 이런 상식이 위협받고 있다. '광우병 괴담'으로부터 미네르바를 거쳐 '천안함 괴담'까지, 그로테스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야 말로 역사 속의 괴담으로 남지 않을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17]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borangsae

요즘 당신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저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참가하기만 해도 연행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안고 밖을 나섭니다. 언젠가부터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두려움도 함께 따라옵니다. 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낫다고 하여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광장에 모여 의사를 표현하고, 뜻 맞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하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비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구속되고, 처벌받고, 국가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

17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 2010년 7월 15일 203호에 실린 글입니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1443

현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거나, 알고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최근 일어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친절하게도 이번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아래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에 정부는 그 단적인 예를 직접 보여줍니다.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대통령과 총리 등 주요인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아 실망을 안고 떠났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특별보고관은 “정부 고위 관료들과 만남으로서 인권의 관심과 의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데 이번 한국 정부의 태도는 인권에 관한 의지가 없다고 보여 진다” 며 “손님을 초대하면 직접 대접을 하지 대신해 다른 사람을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몹시 낯 뜨거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5월 6일부터 열흘간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5월 17일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표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정치적인 이유로 침해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줍니다. 언론에 일부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지만, 무려 A4 9장에 담겨 있었던 특별보고관의 발표 내용을 여기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광장인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회피 연아', '미네르바', '발암 시멘트' 이런 사건들 이후로 혹시 당신도 공적인 비판 글을 인터넷에 게시할 때 주춤하게 되지는 않나요? 혹은 당신이 게시한 글이 유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해서 어느 날 삭제처분이 내려진 경험은 없나요? 특별보고관은 허위통신, 즉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기소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의 제한이라고 지적하며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라는 근거를 사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국가의 의무는 특정한 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공익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된 이 후로 그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나봅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를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스로 민간기구임을 주장하지만 위원장이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다 위원장의 지위가 장관급인 점은 이해 할 수 없고 예산도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열이 아니라 삭제를 권고하고 있다지만 이러한 권고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운영자에게 반 강제적으로 이행된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적과 함께 인터넷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은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다시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전검열'이라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의 명예가 더 중요한가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구요?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명예훼손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별보고관은 국가정보원에 의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사건에 대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된 사례는 어느 곳에서도 유례가 없고 정부기관과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하며 국가는 형법에서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효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2008 촛불 집회 이후 탄압받는 집회 시위의 자유

지난 5월 6일 서울광장에서 표현의 자유 관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도통 허가를 해주지 않던 서울광장에 특별보고관의 방문에 맞춰 집회 허가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특별보고관도 "2008년 촛불 집회 이후로 서울 광장에서 단 1번만 집회 허가를 했는데 그것이 제가 방문한 기간과 일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집단적으로 의사표현 할 권리가 있으며,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잉 폭력행사에 대해 법 집행 공무원들은 자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폭력진압은 확실히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전 표현의 자유

선거 전에는 정책 토론할 자유는 없나요? 국민들은 정책에 관심 갖지 말고 농담 따먹기나 해야 합니까? 특별보고관은 선거전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조항을 확대함에 있어서 무상급식, 4대강 등 선거 주요 쟁점에 관해 토론이 제약된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선거 6개월 전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만약 한국에 선거가 2번이 있다면 일년 내내 주요이슈에 대한 토론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에 관한 지침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국가보안법

1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아비드 후싸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속하여 국가보안법은 강력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7조는 여전히 모호하고 확대 해석 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개정해야한다고 다시 한 번 언급하였고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한 것에 대해 한 사람이 특정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책을 읽을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며 한 인간으로서의 지위는 군인으로서의 지위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의 파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피디수첩 사건,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 기존 공영방송 사장 몰아내기 등 언론계에 커다란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장이나 경영진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고 임명절차가 개정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다원성이 중요한데 특정 기업에 의해 독점 된다면 이것은 명백히 다양성과 공공성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부만이 아닙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상임위원들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위원장은 이를 끝내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특

별보고관은 이러한 것은 위원들 간에 커다란 의견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며 인권위의 태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2010년 인권위 새 위원장이 선임된 이후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관련한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고,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인권위 위원선정절차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공무원, 교사의 표현의 자유

또한, 공무원, 교사들의 의사 표현에 있어서 모든 공직자는 동등하게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이 교사들이 특정 노조의 일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개개인들이 누리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집단적 권리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허위의 통신 조항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정, 명예훼손죄 폐지, 집시법 10조 개정, 선거법 93조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미디어 관련법 무효, 공무원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조항을 폐지해야하며 정치적 의사표현을 폭 넓게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상, 문화, 철학 등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표현할 자유가 필요하고 이것을 국가가 제약하면 안 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희생 속에서 민주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어렵게 일구어 낸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경계해야하고 끊임없이 표현의 자유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고 표현의 자유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이 고귀한 권리에 대해 무관심을 넘어서 회피하고자하는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문

– 2010.5.17, 서울 프레스센터

번역 :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저는 2010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정부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과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방문에 앞서 저는 2009년 10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랭크 라 뤼, UN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항시적인 초대에 기한 한국 정부의 초청과 더불어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고, 저의 전임자가 15년 전에 방문한 이래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가 누리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방문 동안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또는 장관급 인사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이 공식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

전에 요청한 검찰총장 및 국정원 관계자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과의 만남도 환영하지만, 정부가 정책입안을 위한 의사결정권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인권과 표현의 자유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헌신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과의 합동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 또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에 걸친 저의 한국 방문은 매우 알차고 광범위했으며, 16개 국가기관과 면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총리실 사무처장, 외교통상부 차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면담했고,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와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들과 여러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또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표현의 자유 관련 수감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문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저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인 1980년 5월 한국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망월동 국립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광주에서 저는 국세청, 광주시청, 그리고 5.18기념재단 관계자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과 광주에서 인권 단체, 언론인, 작가회의, 노동조합, 학계, 여성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다가 민형사상의 기소를 당한 개인들과의 면담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분량상의 제약 때문에 제가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몇 가지 사례만을 언급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방문에서 장소 제공 등 여러 가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유엔난민최고대표 한국사무소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

수십 년에 걸친 군사 독재정권 이후 한국은 1987년 다당제로 복귀하여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이제 한국은OECD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

해 G20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권이사회의 회원으로서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개인 청원을 허용하는 다수의 국제인권조약들을 비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21조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매개로서,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정의와 책임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 특히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된 한국의 상황을 매우 염려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주된 요인은 기존의 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와 기술적 우위만이 아닌 인권의 존중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통치모델에 대한 헌신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논의가 고도로 정치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방문 동안 계속 강조하듯이, 인권은 정의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인권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개념이며 이에 대한 존중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규제되지 않고” “해로운” 표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국제인권법은 표현의 자유 행사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더불어 특수한 경우 이러한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제 19조 3항 및 제20조 2항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첫째,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제한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이 보호되었을 때 가져오는 효과가 예상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달성하려는 목적에 합당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어떠하든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소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그 지역, 나아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80퍼센트 이상의 가구가 광대역의 빠른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네티즌"의 적극적인 활동 수준과, 온라인 토론방에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교류되는 등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온라인 문화의 출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은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전달하는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는 물론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2년 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형사 기소가 증가하고 있음이 매우 염려 되는 바이며, 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정보유포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의 통신"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십 년간 적용된 바 없으나 지난해 1월 "미네르바"로 알려진 블로거 박대성씨가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후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외환 시장에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공공복리에 피해를 입힌 허위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동안 재판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허위의 통신" 이나 "공공복리"와 같은 개념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표현의 자유 행사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어떤 의견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단지 그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누구도 기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비례하지 않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는 언론이 금융기관들을 조사하고 비판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세계금융위기가 완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정부에 이 법률 조항의 삭제를 권고합니다.

인터넷 정보의 삭제를 위한 임의적 절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공중에 공개된 정보에 의해 자신의 사생활이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즉시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최대 30일간 임시로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민간독립기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음란, 명예훼손, 국가안보 위협 등 다양한 기준으로 인터넷 컨텐츠를 평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과 게시판 운영자들에게 게시물 삭제 등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18]가 서비스를 정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인터넷 상의 정보가 다른 이의 권리 또는 명예를 침해하는지 여부, 혹은 다른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염려스럽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서비스제공자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 더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본질적으로 검열기구로서 기능하고 있고,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정보가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에서 삭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설립 이후 명예훼손을 이유로 2,000건 이상의 게시물이 삭제되었고, 1,500건 이상의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19]은 인터넷에서 삭제하거나 검열이 가능한 정보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광범위한 범죄를 아우르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편파적이라고 생각되는 세 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회사의 목록을 인터넷에 올린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24명의 사례에서 그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위 법률 제 44조의 7을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운동을 지지하는 주장을 담은 58개의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관련된 몇몇 개인은 구속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18 역주: 여기서 서비스 정지 명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오기로 보입니다.

19 역주 : 44조의7 과 44조의 7항인지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특정 기업들이 사용하는 시멘트가 발암물질이 있는 전자 폐기물을 이용하였다고 폭로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최병성 목사의 사건입니다. 이 글로 인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감사원 감사가 청구되었으며 그 결과 안전 기준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멘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에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공익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특정 기업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시되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또한 공익에 해당하는 다른 유형의 온라인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삭제를 요구당한 사례들도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결코 그런 문제에서의 책임을 민간기구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임시 차단되는지에 대한 지침과 결정은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내려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루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명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또한 선거 전에 온라인 신문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에는 가입을 하고 실명을 확인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나 비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것은 공적 토론이 필수적인 선거 기간 동안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200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공적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007년 7월부터 실명제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바뀌어 왔지만, 저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권은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염려됩니다. 인터넷 범죄에 대한 우려에 타당한 점이 있고 정부는 그런 범죄자들을 밝혀낼 책임이 있지만, 저는 정부가 사전적 요구보다 범죄가 일어난 후에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범죄자를 밝혀냄으로써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명예훼손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형법상 범죄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상 기소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의 제기와 형사상 고소만으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위축효과를 낳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명예훼손과 관련한 많은 사건들이 저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중 네 명의 담당피디와 한 명의 작가가 연루된 문화방송(MBC)의 피디수첩 사건도 포함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하고 수입협상을 주도한 정부 관료에 대해 비판을 다룬 결과2009년 농림수산부 관료로부터 이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체포되었습니다. 2010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검찰 측의 항소로 인해서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NGO 대표인 박원순씨가 한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이 시민사회단체를 후원하는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혀 “국가” 명예 훼손을 이유로 고소된 경우입니다. 이는 “국가”가 원고가 되어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례없는 사건입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제 19조 3항에 적시되었듯이,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허위내용이 포함된 표현을 통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명예훼손을 제기하는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철저한 조사는 늘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어느 민주체제에서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는 명예훼손을 형사법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지나친 형사 처벌, 특히 구금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적절한 비형사적 조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형사적 처벌은 더욱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비형사적 조치로는 사과문 발송, 정정 및 반론보도, 명예훼손임을 인정하는 여하한 형태의 출판물 발행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정부에 형사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비판에 대한 관용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 혹은 국가가 명예훼손을 제기하는 원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를 통해 집단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교통방해나 폭력의 개연성을 이유로 금지되거나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09년 6월 전(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며 불법적이고 폭력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집회시위에 한해 이를 금지한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시위가 격렬해지고 그로 인해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시위를 진압하는 행위는 정부가 기본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고 발언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광장 및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포함하여 집회를 열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찰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저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허락된 적은 우연하게도 제가 방문하는 기간 동안의 단 한 건이 유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몰 후 일몰 전 집회를 금지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0년 6월까지 해당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청이 진압경찰들의 과잉 폭력 혐의 조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신분을 확인할 만한 명찰, 고유번호 혹은 기타 신분을 나타내는 정보가 진압경찰의 제복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인해 이들의 과잉 폭력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어려운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또한 경찰들이 배지를 착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어떠한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집회 중 인식표기를 통해 이들에 대한 처벌면제를 방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선거 전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 문서, 도화 및 각종 인쇄물을 배부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는 NGO, 종교단체를 포함한 단체들이 선거의 주요쟁점에 관한 홍보물이나 포스터, 사진 및 문서 등을 게시하거나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체들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방법 안내"라는 제목의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부기구나 종교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과 같은 중요한 선거 쟁점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집회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침이 공직선거법 조항들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주요 선거쟁점과 정책들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제약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러한 활동들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금지되고 있는 사실과 더불어 해마다[20] 두 번의 선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정책에 관한 정보 전달이 1년 내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국가보안법

저는 최근 천안함 사건을 비롯하여 한국이 직면한 안보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모든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떠한 국가보안법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가보안법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검찰의 기소 횟수가 줄어든 점을 환영하는 한편 15년 전 저의 전임자를 비롯하여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내용이 모호하여 오역될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 제 7조에

20 역주: 해마다 두 번의 선거가 있다고 가정할 때

대한 개정을 권고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세 건의 사례 (박태훈, 김근태, 신학철)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밝혔고 더불어 또 다른 두 건의 사례들 (손종규, 강용주)에 대해서도 자유권 규약 제 19조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자유권위원회의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모든 다섯 개 사건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자유권위원회의 견해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 자세를 취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지난 2008년7월 국방부가 선동적이라는 이유로 23권의 서적을 금서 조치한 사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이에7명의 군법무관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두 명이 군 내부 규정위반으로 파면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저는 정보접근권이 자신이 원하는 책을 읽을 자유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0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한 인간으로서의 지위는 군인으로서의 지위에 우선”합니다. 금서조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반민주적인 행위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은 진정으로 민주적이며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임을 환기시키며, 한국의 국가안보정책이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이행될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공영방송

한편 공영방송사들의 독립과 미디어의 다양성이 저해되는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방송사의 사장 혹은 경영진이 함께 바뀌는 관례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임명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여당에 의해 발의된 신문방송법(미디어법)이 2009년 7월 정상적인 숙의과정을 무시한 채 국회에서 채택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입법이 대기업과 신문사, 해외 방송자본의 방송분야 진출을 허용하여 미디어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원칙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에 설립된 이후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내 인권의 증진과 보장을 위해 활발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2004년과 2009년 사이 13건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침해 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2010년 2월,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된 이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주요한 세 건의 사례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미뤄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앞서 말한 세건의 사례들은 MBC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기소사건, 야간집회 금지 그리고 박원순씨 사건 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때에도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안하여, 앞으로 인권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을 채택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인권위원회 임명절차 또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승인 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가 가장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인권위원회의 위원 임명절차는 후보들에 대한 자질평가나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식적인 협의 혹은 시민사회의 참여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인권위원회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덧붙이는 바입니다.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저는 정부 관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한국의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 개인의 정치의사 표현이 금지되는 점을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립성의 원칙에 근거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 표현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되며, 특정 노조의 소속이든 아니든 특히 근무시간 이외의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종 정리

제가 한국방문 기간 동안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저의 방문 목적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재 실태를 과거 상황과 비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인권기준은 한 국가의 인권이 진보했는지 후퇴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비록 한국의 인권상황은 1987년 이후 많은 진전이 이뤄냈지만 지난 2년간 인권에 대한 존중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가 급속히 위축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한국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제 수임사항에 따라 한국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국가방문 보고서는 2011년 6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제가 일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분석이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출국한 이후에도 정부나 개인 또는 시민단체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정보운동 ACT.JINBO.NET
Home 이슈와정책 최근소식 ActOn 블로그 갤러리 미디어게릴라 참여하기 진보넷소개
감청의 상업화와 그 위법성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설치반대!
부모소송인단 모집
section 011. 진보네 워크센터
표현의자유
삭제명령권, 인터넷내용등급제, 선거법, 내용
허위사실유포죄, 광고주 불매운동
프라이버시
CCTV,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인정보
정보, 유전자정보, 위치정보, 전자여권, 전자
제, 전자주민증(전자주민카드), 주민등록번호
정보공유
정보공유라이선스, 카피레프트(COPYLEFT)
twitter @ JINBO.NET
picotera@twitter.com (강진원, Kang Jinwon)
또다시 전자주민증의 유령이 고개를 슬금슬금... 앙
대! @jinbonet @antiropy 전자주민증 반대 성명
냈습니다. http://tinyurl.com/2827ww9
2010년 07월 9일 (금) 15:38:22
'정보운동' http://act.jinbo.net/ 이 새로이 오픈합니다.
진보넷의 야심찬 기획. '30minute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_ 정민경
노동 감시/어린이 감시 반대하긔_ 명야핑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_ 정민경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긴급 성명
일시: 6월 9일 수요일 1시
주최: 서울형 어린이집 IPTV철회 위한
Dugong Dugong

'정보운동' http://act.jinbo.net/ 이 새로이 오픈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인권 사이트 '정보운동'
http://act.jinbo.net/ 이 새로이 오픈합니다.

기존 '정보운동' http://act.jinbo.net/wiki/은 위키(wiki)기반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운동'의 특성 상 위키를 통해 여러 이용자와 소통하며 협업적 운영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검색기능이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못했고 사진, 동영상 등 진보넷의 여러 활동을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위키로 작성된 페이지들은 스패머들의 공격에도 취약했고 그렇게 훼손된 정보들이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유기적인 자료제공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큰 진보넷 활동가들은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새로이 '정보운동'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오픈소스로 개발되어 전 세계 수만명의 개발자와 이용자가 함께 하는 드루팔(Drupal http://drupal.org/)로 '정보운동'을 개편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그 결과를 여러분 앞에 선보입니다.

<'정보운동' http://act.jinbo.net/ 첫 화면>

'정보운동'이 드루팔과 만나 바뀐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보운동'은 진보넷의 여러 활동을 주제별로 분류해 두고 있습니다.

표현의자유 / 프라이버시 / 정보공유 / 지적재산권 / 미디어 / 국제 등 이슈별 분류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진보넷의 활동과 자료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분류는 다시 해당 분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분류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무엇인지 보여드립니다.

사이트 상단의 메뉴바는 이슈와정책 / 최근소식 / ActOn / 블로그 / 캠페인 / 미디어자료실 등 진보넷의 활동들을 유형별, 매체별로 분류 해 두고 있습니다. 개선된 네비게이션 메뉴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페이지, 각 이슈 및 관련 부문 이슈들이 나타난다.>

2. 관심있는 글들을 한눈에!

‘정보운동’에 올라와 있는 각각의 모든 글들은 태그를 통해 주제별, 사안별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하나의 글을 클릭하시면 그 글과 관련된 최근 성명/논평/보도자료, 진보넷의 활동, 사진, 동 영상들 또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검색 없이도 원하시는 자료를 쉽고 연속적으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넷이 그간 발행한 네트워커, 웹진ActOn, 계간지ActOn, 회원소식지-네트보살극락정토 역시 꼭지별, 호수별, 주제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 문서간의 강력한 통합 기능이 진보넷에서 홈페이지 개발툴로 드루팔을 선택한 이유이며, ‘정보운동’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IPTV 관련 글. 우측으로 관련 글과 이미지가 한눈에 보인다.>

3. 간결하고 깔끔한 사이트, 다양한 읽을꺼리

기존의 진보넷 위키 사이트가 정적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드루팔 사이트는 읽을꺼리가 풍성한 동적인 사이트로 변모했습니다. 진보넷의 액션과 갓 생산한 문서는 곧장 '정보운동'에 반영되게 됩니다. '정보운동'에 접속하시는 순간 최근 진보넷의 관심사, 진보넷이 하고 있는 일, 진보넷과 함께 할 수 있는 액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진보넷의 회원소식지, '계간지ActOn'을 pdf나 이메일이 아닌 웹 상에서 꼭지별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꼭지만 선별해서 보실 수도 있으며, 한 회분의 모든 내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진보넷의 공식적인 논평/성명/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진보넷 활동가들의 고민과 진보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인권 관련 논의들 또한 ActOn을 통해 접하실 수 있습니다.

4. 트위터에서 진보넷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러 이용자들의 요구와 반응을 수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 존의 여러 사이트들은 자유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그 역할을 하려 했습니다만, 소통보다는 스팸 삭제에 더 많은 품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보운동'은 1. 덧글, 2. twitter를 여러분과의 소통창구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덧글폼에는 간단한 수식으로 된 스팸필터를 달아 두었습니다.

twitter를 통해 진보넷과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jinbonet, 해쉬태그 #jinbonet을 달아 트윗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트윗하신 결과가 바로 '정보운동' 맨 첫 페이지에 반영됩니다.

<'정보운동' 첫 페이지 twitter@jinbonet>

5. 손쉽고 간편한 공유 및 인쇄

진보넷의 글이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신 글을 여러 사람들에게 1. 이메일로 보내거나, 2. twitter를 통해 공유하거나, 3. 프린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운동'은 깔끔한 프린트 인쇄용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메일, 프린트, 트위터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 만으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진보넷의 내용을 공유 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트 아이콘만 클릭하는 것으로 별도의 브라우저 설정이나 명령 없이 가독성이 좋은 인쇄물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트위터 계정 화면이 새 창으로 뜨고 트윗하고자 하는 글의 제목과 주소가 나옵니다.

정보운동 ACT.JINBO.NET

Published on 진보넷워크센터 (http://act.jinbo.net/drupal)

홈 > 2010년 김프(GIMP) 강좌

2010년 김프(GIMP) 강좌

안녕하세요?! 2010 진보넷 웹기술 공유 강좌합니다!

포토샵, 그림판같은 그래픽툴 아시죠? 진보넷은 비상용 자유/오픈소스 그래픽툴 <김프 ㅎㅎ>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GIMP 는 많은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GNU Image Manipulation Program 의 약자입니다. GIMP 는 사진 편집이나 이미지 생성 및 편집 등 다양한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하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김프는 간단한 페인트 프로그램, 전문적인 사진 편집 프로그램, 온라인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 대량의 이미지 렌더링, 이미지 포맷 변환기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프는 확장성이 뛰어나며 유연합니다. 플러그인과 확장기능의 추가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발전된 스크립팅 인터페이스는 간단한 작업부터 굉장히 복잡한 이미지 편집 작업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김프의 장점 중 하나는 많은 소스로부터 다양한 운영체제를 위한 기능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GNU/Linux 배포판에서는 GIMP 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포함합니다. 또한 Microsoft Windows™ 나 Apple 사의 Mac OS X™(Darwin) 등의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프는 공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General Public License(GPL license,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에 의해 보호되는 공개 프로그램입니다. GPL 은 사용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수정을 허용합니다.

<2010년 김프(GIMP) 강좌의 프린트 전용 페이지>

<"감청의 상업화와 그 위법성"글의 트윗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표시됩니다.>

어떠세요? 새로이 오픈할 '정보운동' 사이트가 기대되시나요? 여기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다양하고 풍성한 기능들이 진보넷의 알짜배기 콘텐츠와 찰떡궁합을 이루어 여러분의 클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drupal의 다양한 기능들을 살려 계속적인 기능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 의견이 있으시다면 본 글에 덧글을 남기시거나 truesig at jinbo.net, twitter@jinbonet 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운동'에 계정을 만들지 않으시더라도 이 모든 것을 누리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운동' 사이트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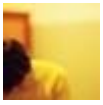
바로가기

- '정보운동' http://act.jinbo.net/
- 드루팔 http://drupal.org/

진보넷의 야심찬 기획. '30minutes'[21]

- 30minutes_#1. On Twitter

#0. 등장인물 소개



김승욱 @hellomoya
진보넷 능력자. 정보통신유행의 대가... 응?

바리 @dellayk (당시 트위터 계정 비활성)
트위터는 있지만 아직 계정을 활성화 하지 않았네염 ㅋ.

오병일 @antiropy
트위터에 그렇게까지 노동력을 투입할 필요는 없죠. 훗~

laron @picotera
저는 50명이면 만족합니다.

박명훈 @dongurie
모든 RT에 일일이 응대하는 것은 인간 한계 초월임 ㅋ.

명야핑 @taiji202
아 이거 뭐야! 맞팔부담yo.

---

21 편집자 주 : 매주 월요일 야심찬 오코디의 사무국 회의가 종료된 이후 30분간 정보통신 이슈, 각 주요 인물 뒷담화, New Device & Service에 대한 심도있고 방대하며 품격있는 대화를 목적으로 진보넷 활동가들이 나누는 소금처럼 짭짤한 대화를 기록하다.

정민경 @?????? (당시 트위터 계정 없었음. 현재 @borangsae)
근데 트위터가 뭐예요? 후훗~♡

탈주선 @?????? (현재도 트위터 계정 없는 것으로 추측)
진보넷 초능력자. 트위터는 안하지만 맞팔의 압박은 잘 압니다?!

#1. 서막.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오면 이것을 트위터에 띄울까?그냥 내가 올리면 되는거야?

그냥 올리면 되지. 무언가를 더 하고싶다면 액션을 제안해도 좋고. 이야기는 계속 번져나가니까. 관련 액션을 모으자면 해쉬태그를 쓰면 되니까.

전 세계에 해쉬태그가 쓰여지면 너무 공해 아닐까?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 건데?

고유한 해쉬태그로 설정 가능해. 한글로도 설정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모아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하면 좋을거야.

재밌다. 재밌네. (깔깔깔깔깔~)

#2. 트위터 어떻게 쓸까?

주제를 한정해 보자구. 우선 우리가 어떻게 트위터를 쓸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하고, 트위터라는 SNS서비스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것으로 하자. 트위터 어떻게 쓸까?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에게 문서도 전달하고 여러 트위터리안들의 메세지도 전달하는거야. 트윗의 웅성거림을 실시간 화면으로 쏘는거지.

괜찮네.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가인권위이 방문할때 하는 거 어때? 광화문, 시청 등 세종로 라인 와이브로 강도가 아주 세거든. 예전 참세상 동영상 생중계때문에 측정 해 봤는데 인터넷 기반의 액션을 하기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5월 6일 기자회견에 집중해서 쏴 보는건 어때?

하루종일은 좀 힘들 것 같고, 특정시간에 쏴야 할 것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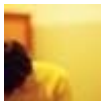
트위터리안의 의견을 직접 스크린에도 쏘고, 이후 의견을 갈무리 해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하는 것에 완전 동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몇가지 액션을 준비하면 좋겠다. 해보자. 해보자.

자동차나 스크린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세팅은 가능할꺼야. 그리고 트위터리안들의 메세지를 직접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보여준다고 해야 메세지도 밀집되고 효과가 있겠지.

실제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트위터 메세지 쏘는 것을 보게 될까? 날씨 상태 등 여러 변수가 많고 또 실제로 메세지를 보기는 힘들텐데.

트위터리안의 메세지가 출력되는 현장에서 보기는 힘들겠지. 하지만 해쉬태그를 모아서 출력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행위는 한국 트위터리안의 메세지가 UN에 직접 전달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괜찮은거지.

LED는 구할 수 없을까? 스크린으로 쏘는 것은 흐릿해서... 흠.



이야기는 해 볼텐데 확실하지 않네. 안되더라도 뭐 한번 해 봐야지.

결국 Twitter 전략은 뒤로 한 채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관련 액션 이야기를 했군. 적절하다.

#3. 트위터 일반론?!

정말 그렇게 많이들 트위터 해?

옛날 아고라의 기능을 하고 있지. 음모론이 유출되는 성지라고나 할까...

아 또 음모론 이야기야.

트위터는 분명히 효과적인 매체야 언론들도 기사 말미에 트위터의 반응을 싣고 있고 기업들도 트위터 이용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있잖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주요한 소통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아?

그럼 나도 140자 스팸을 잔뜩 쏴 볼까? 아... 갈수록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 기자회견 자료도 전문가용, 기자용, 일반시민용으로 다르게 가공해야 하고, 그걸 또 소식지에 넣을 꺼, 계간지에 넣을 꺼 등등. 다양한 매체 다양한 활용을 계속 해야 한다 생각하니.

짧다고 해서 내용이 가볍거나 쉬운건 아니야. 압축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만큼 신경을 써야 해.

블로그에 들이는 공 만큼을 또 트위터에 들여야 하는 수준인거군. 흐아...

트위터가 그렇게까지 힘들여 쓰는 매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가볍게 자기 생각을 달고 그러다 더 필요하면 링크나 이미지를 거는 방식으로 대체 할 수 있어. 너무 부담 가지지 않는게 중요한데...

이게 트위터도 결국 명성시스템이야. 어떤 사이트의 경우 유명 트위터리안이 관련 내용을 쏘면 무시못할 수준의 사람들이 실제 비용을 내고 다운로드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명성을 얻고 온라인에서 힘을 획득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거지.

그것은 그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가진 명성이 있었던 것이지 . 유명 트위터리안이 사실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블로그에 투자했는지 알려져 있기 때문이잖아. 트위터는 블로그에 비해 그렇게 노동이 들지는 않아.

그렇지 않아. 트위터에도 얼마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거에 일일이 리트윗으로 응답하고 덧글달아야 하는데. 굉장한 노동이 들어간 단말야.

트위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각 개인/단체의 판단에 따라 노동강도가 달라지는 것 아니야? 어떤 이들은 그저 접속할 때 보이는 것만 읽기도 해. 트위터 운영목적에 따라 노동투여 정도도 다를 거야. 자기 리트윗에 일일이 응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마이크로 블로그로서의 트위터냐 반-채팅으로서의 트위터냐 사이에 있다고.

영향력은 트위터 운영 주체가 선택하기 나름이지. 각자가 다른 누군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잖아. 나에게 트위터가 긍정적인 것은 다양한 뉴스소스틍을 통해 이야기를 여러 관점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야. 나는 IT관련 뉴스는 전부 트위터를 통해 보거든.

그런게 최근의 웹 트랜드지. 사람이 작동하도록 해서 정보의 판단을 제공하는 것. 적은 노동이 모이고 그 사이에서 가치가 떠오르게 만드는 것.

리뷰 사이트가 많지만 결국 자신이 아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에 더 신뢰가 가기 마련이니까.

정치, 경제 등 특정 영역의 컨텐츠는 명성에 의해 좌우되잖아. 포탈식의 모델이 아닌 적극적 행위모델로의 진화.

하지만 기존 모델과 차이가 있지 않나? 트위터는 그 관계망을 내가 선택하고 전부 평등하게 시작하잖아. 그리고 내가 그 관계망에서 더 많은 것에 욕심내게끔 추동하는 것, 그러니까 파워블로거니 어쩌니 그런게 없잖아. 그래서 난 트위터가 편하고 더 가볍길 바라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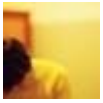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 경제 등 특정 영역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에 대한 신뢰를 쌓기를 원하잖아. 그렇게 퍼져있는 팔로우-팔로잉 관계망속에서 이야기들이 형성되는 것이고.

트위터의 컨텐츠는 소비속도가 너무 빨라. 지속적인 관리도 너무 힘들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팔로우 하면 부담스럽지 않나? 나도 뭔가 팔로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팔로우 안하면 자신이 어떤 필터링에 의해 걸러졌다는 느낌도 들테고. 아우~ 신경쓰여.

페이스북도 명성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검색이 되잖아. 트윗이건 페이스북이건 이런 특성을 진보넷이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정부의 추천 시스템을 진보넷 서비스 안에 잘 융합하면 좋을텐데.

진보넷 능력자이신 승욱님, 한 말씀만 하소서.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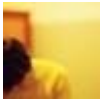


민경씨는 트위터 안해요?

할꺼예요. 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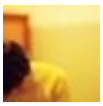
한국의 트위터가 외국의 트위터에 비해 무겁지 않아? 사적인 메세지의 빈도는 낮고 정보의 유통채널로서 가지는 중요도는 높은 거 같아. 해쉬태그를 보아도 외국 애들은 #nowieat 같은게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런거 쓰면 스패머 취급하는 분위기 같고 말야. 흠...

트위터는 이미 공적인 명성쌓기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 같아.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좀 다른 것 같아. 페이스북에는 뭔가 사적인 느낌이 남아있거든.



페이스북은 트위터보다 더 많은 그리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자나. 사진, 동영상, 링크 등을 자유로이 제한없이 할 수 있고 구글의 Buzz 등 다른 SNS와의 연동도 굉장히 매끄럽고. 더욱이 컨텐츠 소비속도가 유저들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트위터의 너무 빠른 속도보다 좀 더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고.

그렇다곤 해도 뭐 최근의 SNS시스템은 거의 비슷한 거 같아. 높은 자유도와 명쾌한 단순함.



"더 이상의 프라이버시는 없다. 다시 페이스북을 만든다면 비공개 옵션을 없애고 만들었을 것이다" 이건 페이스북 만든 이가 최근에 한 말이래. 관계와 명성 등 오프라인의 요소들이 더 중요해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드러내고 관계맺기가 시작되는 것이지. 이런 자기-드러내기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맞물려 있어.

사실 그것은 보편적인 현상 아닌가? 예전부터 사람들은 자기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지. 다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 이들을 위해 익명의 표현의 자유도 주장하는 것이고. 페이스북의 클릭수가 구글을 앞서고 있다 하니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4. 책상에서 일어나며

흠. 근데 탈주선은 트위터를 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그런걸 잘 알지? 신기하네... 병일, 트위터로도 LG소식 듣지 않아요?

그건 뭐, MLB.COM으로 충분한걸~ 소스가 이미 많으니까. 페이스북 써보지도 않았는데 빨리 개설 해 봐야겠다.

그거 알어? 오병이 예전에 진보넷 블로그 말고 엠파스에다가 자기 야구 이야기 블로그 따로 만든거?

헐. 완전 배신자.

정리 : 오만과 편견과 애처로운 육체미의 **laron** @picotera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정리[22]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borangsae

2010년 5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년을 맞아 방통심의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의 사회로 발제자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과특별위원회 전 위원이었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전응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기님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22 토론회 발제문 전체 보기 http://act.jinbo.net/data/policy/11/20100511kocsc.PDF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방향 (윤여진/언론인권센터)

먼저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와 관련해 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심의의 공정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와 행정기관으로서의 심의위원회의 책임성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에 근거해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와 권리침해에 관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정요구비율이 2008년에 50.7%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72.4%, 2010년 87.3%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심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계적인 통과 절차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심의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의 문제

권리침해로 인한 시정요구로 게시물이 삭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부족합니다. 개인들 간의 권리침해의 경우 얼마든지 개인 간에 시비를 다툴 수 있는 문제로 전문성과 양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경청하고 일방적인 권리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과 관련 이의신청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결정해야하고 이는 독립된 기구가 맡아야 할 것입니다.

-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인한 한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회의결과 및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회의록만으로는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데다 자의적 심의가 어떤 영역보다 큰 권리침해 영역에서의 회의 자료를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것인데요. 정보공개법 제 14조에 따르면 정보와 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 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본규칙에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에 대해 소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의 의견과 반대되는 결정을 한 사례를 보면 특별위원회의 자문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 불명확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정하는 9인으로 구성되는데 정치적인 고려와 더불어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하며 특히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위원들의 책임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의에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중적 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시정요구는 게시물이 올려진 포털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권고이며 게시물 삭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포털 서비스 운영자에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판결에서 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가 아닌 행정기구로 보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원회가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되자 민간독립기구라고 주장하고, 권한을 행사할 때는 행정기관이 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이며 방통심의위의 행정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심의와 게시물의 권리침해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기도 전에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는 월권행위로 헌법이 정한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분석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활동가는 2009년 1차에서 2010년 10차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회의록과 회의 자료를 통해 통신심의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먼저,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민간단체의 조사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에 관한 회의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례분석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인의 사적 사안은 논란이 있지만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것은 반드시 공

개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 심의과정의 문제점

심의과정에서 2009년 한 해에만 총 76차에 달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개최되었고 1회에 다루는 심의양도 많은데 이것에 대한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심의가 기계적으로 '시정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명예훼손 등 사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심의 과정에서 작성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으며, 신고자의 주장에 의존하여 심의하고 삭제하고 있고 중앙행정부처의 요청에 거의 따르고 있는데 이는 독자적인 심의보다는 공공기관의 부속기능으로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의 기준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법률에서 규정한 불법성이나 유해성의 범위를 넘어선 모호한 기준으로 심의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인터넷을 심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는데 현재 방통심의위의 심의 기준 역시 위헌적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특성에 맞지 않은 심의 기준도 문제가 되는데 인터넷에 준언론에 달하는 언어표현 수위와 사실 확인 의무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고 이것을 게시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먼저 인터넷 매체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심의결과의 문제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비율은 거의 100%에 달하며, 이는 권고로서의 의미가 아닌 사실상 행정청의 행정처분과 같은 강제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또한 삭제 외에 이용정지나 이용해지는 높은 수준의 기본권 제한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이용자 계정의 해지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선정적이거나 불법적인 사이트의 배너를 게시하고 링크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전체 이용해지를 결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 소지가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표시의무 이행이 아니라 거의 삭제나 이용해지를 요구하는 것 또한 과잉규제인 것입니다.

이의신청에 관련하여 이용자의 이의 신청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기관이 기본적으로 애초 심의했던 기관과 동일하다는 것, 이의신청이 인용 되더라도 영구삭제가 이루어진 경우 복구가 불가능 하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 방통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 유형별 심의 분석

유형별 심의 분석 결과,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원회가 소임하는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는데요. 방통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에 따른 주제별로 구분을 해보면 '기타범죄정보'(9호)에 대한 시정요구가 2008년 22.9%, 2009년 28.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범죄를 '특정'하지 않은 채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 및 관련 법령(통신심의 관련)] 자료에 거론된 '기타 범죄'에 따른 소임은 총 55개에 달하는데 심의위가 이것을 모두 소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방통심의위가 이 모든 법령의 위반 사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고 그러한 문제로 의결보류가 잦고,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결정 번복도 잦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예로 자살방법 및 자살도구에 대하여 단지 묘사하였다는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입니다.유해정보 심의에 있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넘어서는 자의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 사례로 의료정보의 일부 성기 이미지를 표시한 경우 시정요구를 했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자 인용하는 등 너무 포괄적인 범위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나서 욕설이나 잔혹한 표현물을 일일이 수집하고 삭제하는 것이 공공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인지 또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에 대통령에 관한 욕설을 저속한 언어표현이라고 삭제를 한다던가, 욕설제조기 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고 너무나 자의적으로 심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명예훼손에 대한 심의인데, 방통심의위는 명예훼손을 법원의 판례에서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논쟁적이거나 판단이 모호한 사안의 경우 욕설 등 '표현수위'를 문제 삼아 삭제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사건의 경우 언론보도에 의존하고 게시자가 연설 원고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요구 한 것, 쓰레기시멘트 사건과 관련하여 게시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과학 실험을 실시할 것

을 두고 논쟁하는 등의 사례는 무엇보다 공적 비판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고 게시 당사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결정 절차를 전면 재고해야함을 보여줍니다.

방송심의와 통신심의를 분리하여 조직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방송과 통신의 성격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고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심의와 통신심의의 기관을 분리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성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과 허가'를 금지하고 있고, 방통심의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행정기구임에도 그 재량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권에 의해 시행되는 한 사전검열과 사후검열은 몇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고 했는데요. 첫째, 행정적 판단은 법치국가에서 항상 사법심사에 의해 바로잡히기 전에는 '잠정적'이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표현이 위축되어 있다는데서 불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기관은 권력자의 영향력 하에 있어 권력에 비판적인 합법적인 표현물들을 위법한 것으로 몰아 제재할 위험이 높다는 것, 셋째, 행정적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사법부가 보전을 해주면 되지만 행정청의 경우 자신들의 잠정적 판단에 불복할 경우 정부지원금 분배 등을 통해 보복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방송국들과 인터넷포털들은 MBC에서 딱 한번 문제제기를 했을 뿐 방통심의위와 그 전신인 기관들에 대해 공식적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음란물 및 아동유해물만을 걸러내는데 우리나라처럼 제 44조의 7에 따라 '명예훼손'정보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정보'처럼 애매모호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행정기관이 걸러내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의 사후심의를 일종의 '검열'로 규정하며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가 있다고 소개하며 이는 인터넷 심의기준이었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이 행정기관에 그 운용을 맡기기에는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방통심의위의 심의의 기준이 되는 '불법정보'의 내용 중의 일부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3월, 최문순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한 좋은 법안이지만 보완할 부분도 좀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위반정보"의 애매모호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방통심의위원회가 아니어도 각 행정청은 게시자에게 직접 삭제명령을 함으로써 행정상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의 자체가 당사자주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명예훼손 등 기타 권리침해성 심의신청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고위공직자의 심의신청은 모두 각하해야한다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로 참석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방통심의위원회가 어떤 존재이고 한국사회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셨는데요. 첫째로, 당사자에게 고시도 해주지 않고 의견 진술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심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중앙행정부처에 대한 심의요청이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런 남용을 막기 위해 절차적 모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심의기준을 100%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해야함에도 현재 방통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 제 44조의 7항 제9호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청소년유해매체가 광범위한 기준으로 삭제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정보가 아님에도 불법정보로 변질될 상황이 우려되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그 게시물을 심사했던 기구가 다시 하는 형태이고 영구삭제가 된 게시물의 경우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삭제하는 정교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방통심의위원회 같은 공적 심의기관이 명예훼손을 심의하는 것

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명예훼손 정보의 요청은 정치인이나 국가 권력을 담당하는 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과 명예훼손의 경우 심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적 심의기관이 맡는 것은 불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심의보다는 분쟁 조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방통심의위원회의 큰 문제점은 오직 방통심의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왜 국가기관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며 이것은 전적인 오류이고 표현의자유의 맥락에서도 문제이고 국가영역인 방통심의위원회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그 외의 것들은 자율기구나 민간영역에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불법이나 사행성 같은 것은 방통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부분은 자율적 규제, 명예훼손의 개인적 부분은 분쟁조정기관이 담당하여 역할분담 해야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 적용과 구조적 문제 (전응휘 / 녹색소비자 연대 이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과특별위원회 위원)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과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방통심의위원회가 당사자 진술을 듣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명백하게 제재하기 전에 당사자 의견을 청취해야한다고 법에 되어있지만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 제21조 3호를 거론하지 않고 제21조 4호만 가지고 시정요구와 관련된 관련조항만 적용하는데서 옵니다.

시정요구가 아닌 경우, 즉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의 기본 구조는 방통심의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못하고 모든 유형의 행정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통심의위원회는 법률상 허용된 권한을 넘어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시정요구까지 광범위하게 하면서, 법률상 하도록 되어 있는 당사자의 의견진술도 받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 7호는 설치법 21조 3항과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고 설치법 21조 4호와 그에 연관된 것들만 시행요구에

갖다 붙여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심의위가 44조 7의 7항과 8항만은 지킨다는 것인데요. 이는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의 내용인데 이것을 국정원이나 경찰이 삭제요구를 하면 그대로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절차기준에 따라 중앙행정부처가 요청해왔을 때만 처리해야하지만 중앙행정부처가 요구하지 않아도 시정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이렇듯 현행법제도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적용하여 사용하고 편법적, 하행적으로 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고 이는 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심의대상과 예산 높이기에만 주력한 사무국의 요청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방통심의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 융합 환경에서 전반적으로 규제완화를 해야 하며 현재는 통신에서의 표현의 수위, 사실 확인을 중요시 하는 것은 공적매체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통신매체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하지만 이는 큰 문제가 있고 위원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앞으로 방통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모든 심의내용 정보를 공개해야하고 민간단체, 국회에 리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말을 마쳤습니다.

■ 개인적 감상

토론회를 방청하면서 방통심의위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전문성의 부족과 자의적 심의가 큰 문제라고 느껴졌는데요. 도덕성을 강조하며 인터넷 매체의 이해 없이 욕설과 유해를 구분 짓고, 일정한 기준도 없는 심의가 과연 인터넷 이용자들의 판단에 영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방통심의위가 권력자의 편에 서서 심의 명분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는 주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출범한 이후 2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심의를 계속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심의기구의 독립성은 공정하고 객관적 심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구조가 아니라 진정한 민간독립기구가 인터넷 매체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 감시/어린이 감시 반대하긔

뎡야핑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taiji202

오늘(2010년 6월 9일)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달아 보육 교사와 아이를 감시하고, 더불어 집과 직장 등 인터넷 회선과 아이디/비번만 있으면 cctv로 찍히는데다 음성녹음까지 된 걸 iptv로 볼 수 있다네염. 아이가 찍힌다는 데 대한 부모의 동의를 묻지 않은 상태고, 교사의 동의는 형식적으로만 묻고 진행한 상태입니다. 싫으면 안 달께, 가 아니고 그만 둬라 이거죠.

근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불법이라능.. 그래서 진보넷과 보육노조, 진보신당 등이 모여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장에 기자는 별로 안 오고 시행사인 sk 브로드밴드가 아닌 다른 회사(?)란 데서 사람이 와서 님들이 고소/고발해야 할 것은 우리이지 sk가 아니라는 초유의 난감한 상황 발생!! 짐이 곧 시행사다, 나를 고소하라! 라는 느낌이었어요. 왜 님이 여기 와서 이러냐, 서울시 공문에 sk 브로드밴드가 명기돼 있다, 서울시에 얘기해야 말해도 그 님의 말은 여러분이 sk한테 그러는데 sk는 아무 관련도 없고 모든 것은 나의 회사의 일이니 나를 따르라...()라는 반응 뿐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히 쓰면 이해가 안 갈라나...;

할튼< 어린이집에서 상시적 노동감시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린이를 찍어서 낯모르는 이들에게 방출하는 이 방식에 반대하는 부모소송인단도 모으고 있습니다. http://iptv.jinbo.net 부모소송인단을 모집하는 이 홈페이지는 아직은 활성화 안 된 상탠데, 함 구경해 보세요. 내가 만들었음...<(외관만ㅋ)

기자는 없어도 우리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지롱 캬하하하

현재 sk브로드밴드는 "IPTV사업에서는 '서울시 IPTV'와 학교 IPTV 등 공공분야와 연계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당.(출처 : SK 브로드밴드, 2010년 1/4분기 매출 4,930억원) 부자다...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공청회 후기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borangsae

최근 인터넷상에서 이용자 검색내역 등 행태정보를 축적,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행태정보 기반 광고란 소비자의 온라인 행태를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맞추어진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확대하려는 광고사업자들과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는 이용자, 시민단체 간의 의견차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소비자단체, 법학전문가, 광고제공업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 "옵트인"인가? "옵트아웃"인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제 7조에 따르면 식별성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집 이용목적,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행태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이용자가 해당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옵트인), 제 8조에는 비식별성 행태정보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행태정보의 수집 및 광고가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옵트아웃) 명시해놓았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는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device)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IP주소, Cookie)등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동시에, 그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는 없어도 고유한 개체에 대한 식별만으로도 행태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상업적인 마케팅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에 대한 논의와, 어느 것이 현 시점에서 더 중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이은우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팀장도 비식별성 행태정보라고 해도 개인정보와 결합해 식별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옵트아웃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진화 차장은 비식별성 행태정보 자체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별정보와 결합이 불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야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HN(주) 개인정보보호팀 이진규 팀장은 쿠키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한 컴퓨터로 여러 사람이 사용할 경우 한 명이 옵트아웃을 하면 다른 사람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이다.

■ 더 많은 쟁점들

한편,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를 옵트인으로 할지 옵트아웃으로 할지 결정하는 문제 외

에도 이번 가이드라인의 쟁점은 참으로 많다.

아이피주소, 쿠키의 고유 아이디 등을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로 볼 것인지 비식별 정보로 볼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KT 등 인터넷회선사업자(ISP)를 이용한 DPI(Deep Packet Inspection) 방식의 패킷 감청이 쿠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쿠키를 개인정보로 보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인터넷 회선을 통해 교환하는 인터넷 정보는 모조리 광고업체의 분석대상으로 전락하고 이용자의 결정권은 축소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로 본다고 말했으나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제 9조에는 행태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해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제 13조에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이용자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NHN(주) 개인정보보호팀 이진규 팀장은 이에 대해 광고주의 선호도를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이용자들의 일방적인 불신을 조장하여 광고시장 전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오상진 과장은 옵트아웃 권리가 주어졌는데도 이용자가 거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표시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국내 광고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광고제공자와의 역차별로 인한 국내 광고 산업의 축소와 위축,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진입장벽에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우려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팀장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내 광고 제공 사업자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향후 광고 산업의 발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이용하게 될 이용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자세한 설명과 그들의 선택권에 대해 알리는 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온라인 행태정보 기반 광고가 광고 산업에 큰 발전을 불러올지 모르나 그것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권 보다 앞설 수는 없을 것이다.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긴급 성명[23]

이 성명은 2010년 6월 16일-18일, 아메리칸 대학 워싱턴 법대에 모인 6개 대륙에서 온 90명이 넘는 학자, 전문가, 공익단체 대표들이 가진 회의에서 합의된 결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아메리칸 대학의 '정보 정의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프로그램(PIJIP: Program on Information Justice and Intellectual Property)'가 주최한 이 회의는 2010년 4월 처음 공개된 위조방지무역협정의 공식 문안을 분석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협상 당사국들은 전례없이 폐쇄적으로 진행된 협상 절차에 대한 공공의 비판과 협상 내용을 둘러싼 불안이 확산되고 나서야 이 협정 문안을 공개하였다(웰링턴 선언, 투명성과 ACTA 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EU 결의안 참조).

23 원문은 http://www.wcl.american.edu/pijip/go/acta-communique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정문 초안의 내용이 수많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며, 여기에는 협상 대표들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한 것들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 협상대표들은 ACTA가 시민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CTA는 시민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 협상대표들은 ACTA가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 협상대표들은 ACTA가 합법적인 제네릭 의약품의 국경 검색을 증가시키거나 제네릭 의약품의 합법적인 국경간 이동을 제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럴 것이다.

● 협상대표들은 ACTA가 사람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누진적 대응" (역자 주: 저작권 삼진아웃제)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ACTA 는 심각하게 잘못된 과정으로 협상되고 있으며 이로부터 예견했던 결함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 협상은 세관 당국들의 협력을 모색하려는 비교적 단순한 제안에서 시작되었으나 전 지구적 차원의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들이 이 협상을 전략적으로 악용하면서 이제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규범과 인터넷 규제로 변형되었다. 그 결과 세계 경제와 공익을 보호/증진할 정부의 권한에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중요하며 광범위한 협상은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언론 보도가 보장되고, 협상 문안에 대한 계속적으로 열린 접근이 보장된 광범위하고 의미있는 협의적 절차에 기반해야 하며, 모든 범위의 공익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래에 상세히 설명한 것처럼, 이 문안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제안들을 기초로 협상이 더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2010년 4월에 공개된 초안을 공정한 입장에서 분석한 결과, 세계적 차원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최소한 7개 핵심 영역에서, ACTA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기본권과 자유

ACTA 는 건강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보호, 표현의 자유, 교육, 공정한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포함한 법적 절차의 권리, 문화적 참여 등 국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인권을 포함한 기본권과 자유의 향유를 위축시킨다.

인터넷

ACTA는,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가입자의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감시 정책을 채택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협상국들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자와 (지재권) 권리 보유자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행위를 감시하도록 조장할 것이다.

● 법원의 감독이나 적법 절차 없이 사기업들에 의한 인터넷 감시를 조장하고, 인터넷 접속 차단이 일종의 처벌처럼 이루어지게 할 우려가 있다.

● 혁신과 경쟁, 자유 (자유를 존중하는) 소프트웨어, 열린 접근 사업모델, 상호호환성, 이용자 권리의 향유, 이용자 선택권을 위협할 '반 우회' 조항(역자 주: 암호화와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깨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규제하는 조항)을 지구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

ACTA는 적정한 가격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위협할 것이다.

● 의약품이 생산국과 수입국의 법률을 침해하지 않을 때조차도, 경유 국가에서 세관 당국이 해당 의약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가함.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약품의 원료 물질이 지재권 침해에 이용된 경우, 의약품의 원료 물질 공급자를 지재권 침해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규정함.

● 기술 혁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령 연구/개발 비용과 제품의 시장 가격의 연결 고리를 단절하려는 공공 정책),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부여하는 강제실시, 또는 특허발명의 정부 사용과 같은 주로 특허 제도에 활용될 수 있는 공공 정책의 일환으로서 권리침해의 금지명령을 유연화하려는 정책 수단의 제약.

● 협정문의 적용 범위를 특허로 확대(이는 위조 상품 근절과는 관련이 없는 영역임).

지적재산권법의 범위와 속성

ACTA는 다음과 같이 (지재권) 소유자와 이용자의 권리/이익의 기본적 균형을 왜곡할 것이다.

● 권리 보유자를 위한 매우 구체적인 권리나 구제책은 도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이용자를 위한 예외, 제한, 절차적 면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없음.

● (지재권) 소유자의 요구만 배려하는 방식으로, 공공 기관이나 사적 중개자에게 (지재권) 집행의 부담을 이전.

● 손해배상액을 정해진 공식에 따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입증된 피해나 이익과는 관련성이 없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권리 보유자에 의한 집행 절차의 남용을 강력히 제약할 수 있는 정책의 부재.

● 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혁신을 제약하며 녹색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더디게 할 수 있는, 경직된 금지명령, 손해배상, 강화된 민형사 집행조항 포함.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권리예외 조항, 예를 들면 승인(authorization)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보통법 국가의 권리예외 조치의 지속이나 개발의 제약.

국제 무역

ACTA는 필수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의존적인 개발도상국에 편향적으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무역) 장벽을 높일 것이다. 특히, ACTA는,

● 세관 당국으로서는 판단하기 불가능한 복잡한 법률 문제와 사실관계가 얽혀있는 특허 침해가 주장되는 물품을 포함하여, 지재권 침해물로 "의심되는" 광범위한 범위의 물품에 대해 '직권에 의한' 국경 검색과 압류 조치, 그리고 환적 물품에 대한 국경 검색 및 압류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국제법과 기구

ACTA는 직간접적으로 기존의 국제법 및 절차와 많은 점에서 충돌한다. 특히, ACTA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수입국" (TRIPS 52조) 대신에 "절차가 진행되는 당사국의" 법률에 기반하여 압류를 허용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남용에 대한 핵심적인 보호(41.1, 48.1, 48.2, 50.3, 53.1조),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유연성(TRIPS 44.2조), 집행 조치의 비례성에 대한 요구(46,47조), (지재권) 소유자, 소비자, 전체 사회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조항(TRIPS 7, 8, 41.2조)을 완전히 보장하고 포함하지 못함으로써 TRIPS와 간접적으로 충돌한다.

●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TRIPS의 유연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국가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대한 WTO 도하 선언' 및 세계보건기구 총회(World Health Assembly)의 결의문 61.21과 충돌한다.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개발 의제, 특히 "보다 넓은 사회적 이익과 특히 개발-지향적인 맥락에서 지적재산권 집행을 다루려는" 권고안 45를 훼손한다.

● 새롭고 불필요한 국제 행정기구를 창설함으로써 WIPO 및 WTO의 역할을 약화시킨다.

민주적인 절차

ACTA는 다음과 같이 전통적이고 헌법에 의해 위임된 법 제정 절차를 변경한다.

● 논란이 있고 문제가 많은 집행 관행의 전파와 고착화, 그리고 기술 혹은 정책의 변화에 대응한 향후의 법제 개선의 제한.

● 입법 과정없이 많은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법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

ACTA 협상의 절차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특히, 이 협상은,

● 많은 다자간 협상처럼 공개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 이 협정이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 정책상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 몇몇 이해당사자에게만 비공개를 전제로 의견 제시가 허용되었고, 자주 바뀌는 협상 문안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되었다.

● 이해당사자들(특히 시민사회)의 균형있는 대표성이 부족하다.

연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단체, 국적과 도시를 기입하셔서
acta.declaration@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2010년 8월 10일 진보블로그 개편
개편에 필요한 블로그 서버는 총 두 대
두 대 값은 부가세 포함 6,710,000원
6기만원은 어디에?? ;ㅅ;

블로그 서버는 블로거들이 사보자!
서버에 이름을 새겨보자!!

기업은행 057-036794-04-041 진보네트워크

자매 프로젝트

1만원이면 족하다!!

유물론자 1만원계

유물론자가 생산한 데이터는 어디에 보관됩니까?

유물론자 진보블로거들
유물론자 예비 진보블로거들
익명의 모든 유물론자들
유물론자라면 서버를 사자!

정보화 시대가 진행된지 10년.
정보이는 것, 그 모두가 기록되는 감시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운하 밑에 로봇 물고기를 두어 물속까지도 감시하겠다 합니다.
동네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위협적인 문구들로 가득합니다.
액믹이 – 흉한 일을 막기 위한, 미신과도 같은 감시에의 맹신.
트좁 잡고 싶어서 괜한 말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감시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저들의 미신을 깨트리고자 합니다.

02
9 771976 195007
ISSN 1976-1953

구입 및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 전화 02-774-4551 http://act.jinbo.net

계간 정보운동 액트온 | 2010년 | 통권 제9호 발행일 2010년 7월 23일 등록일 2003년 8월 1일 발행처 진보네트워크센터 발행인 이종회 편집인 라론 등록번호 서울 바03353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 우리타워3층 | ISSN 1976-1953